

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으로, 공적연금으로

2015년 연금행동 활동보고서

**표지면지**



## Contents

- ✓ 회의보고 | 3
- ✓ 활동보고 | 13
- ✓ 활동자료 | 37
- ✓ 정책자료 | 91
- ✓ 선전자료 | 135



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으로, 공적연금으로  
2015년 연금행동 활동보고서

# 회의보고 | 3



**■ 연금행동 1/13  
집행위원회 회의**

1월 13일(화)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정용건), 정책위원장(김연명), 한국노총(유정엽 정책실장), 민주노총(이창근 정책실장, 이재훈 정책국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연구원), 공공운수노조(류남미 국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운영위원장, 김동현 국장), 노동자연대(신정환), 사무국장(구창우) 6개 단체 12명 참석

**[논의]**

1. 2015년 사업계획
2. 기타

**■ 연금행동 1/27  
집행위원회 회의**

1월 27일(화) 오후 3시  
민주노총

**[참석]**

집행위원장(정용건), 민주노총(이재훈 정책국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연구원), 공공운수노조(류남미 국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김동현 국장), 노동자연대(신정환), 참여연대(김남희 팀장, 김잔디 간사), 사무국장(구창우) 5개 단체 9명 참석

**[논의]**

1. 2015년 사업계획
2. 연금행동 확대 재편
3. 기타

**■ 연금행동 2/10  
집행위원회 회의**

2월 10일(화) 오후 3시  
신한금융투자노조 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정용건), 한국노총(김준영 정책본부장), 민주노총(이재훈 정책국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연구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운영위원장), 노동자연대(최영준 운영위원, 신정환), 참여연대(김남희 팀장, 김잔디 간사),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사무국장(구창우) 7개 단체 12명 참석

**[논의]**

1. 2015년 사업계획
2. 연금행동 확대 재편
3. 기타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전체 준비회의**

3월 3일(화) 오후 2시  
민주노총 교육원

**[참석]**

집행위원장(정용건), 한국노총(유정엽 정책실장), 민주노총(이재훈 정책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박차옥경 사무처장, 김손경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연구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김동현 국장), 노동자연대(최영준 운영위원, 신정환),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노후희망유니온(김봉은 사무차장), 공무원노조(오성희부장), 사무국장(구창우) 10개 단체 15명 참석

**[논의]**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가) 실무 준비회의 결과 보고
2.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가) 출범 준비자료 검토
3.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가) 출범 기자회견(안) 검토
4. 기타

**■ 연금행동  
대표자 회의**

3월 3일(화) 오후 2시  
민주노총 교육원

**[참석]**

집행위원장(정용건), 한국노총(최두환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최종진 수석부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박차옥경 사무처장), 공무원노조(이충재 위원장), 전교조(변성호 위원장), 공공운수노조(최준식 부위원장), 국민연금지부(김영균 위원장), 철도노조(신동호 대협위원장), 참여연대(이태호 사무처장), 민중의힘/한국진보연대(박석운 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박경석 대표), 사학연금공대위(이수진 공동대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조희주 대표), 전태일노동대학(김승호 대표), 노년유니온(김선태 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운영위원장), 사회진보연대(정영섭 공동운영위원장), 빈곤사회연대(김윤영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승훈 사무국장), 노동자연대(최영준 운영위원), 노후희망유니온(염성태 대표) 등 23개 단체 대표

**[논의]**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조직체계
2.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재정분담
3.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책과제
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업계획
5. 기타

**■ 연금행동 3/24  
집행위원회 회의**

3월 24일(수)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정용건), 한국노총(유정엽 정책실장), 민주노총(이재훈 정책국장), 공무원노조(전호일 부위원장, 오성희 부장), 노동자연대(신정환), 참여연대(김남희 팀장), 사무국장(구창우) 5개 단체 8명 참석

**[논의]**

1. 교육홍보 사업계획
2. 4.25 국민대회 기획
3. 기타

**■ 연금행동 4/9  
집행위원회 회의**

4월 9일(수)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정용건), 공무원노조(전호일 부위원장, 오성희 부장), 노동자연대(최영준 운영위원, 신정환),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연구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김동현 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김손경미), 사무국장(구창우) 5개 단체 10명 참석

**[논의]**

1. 교육홍보 사업계획
2. 정책위원회 사업
3. 4.25 국민대회
4. 기타

**■ 연금행동 5/14  
집행위원회 회의**

5월 14일(목)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정용건), 정책위원(제갈현숙), 한국노총(유정엽 정책실장), 공무원노조(차영순 실장), 공공운수노조(박해철 부위원장, 박지영 국장), 국민연금지부(최강섭 수석부위원장), 노동자연대(최영준 운영위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연구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김동현 국장),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사무국장(구창우), 총괄간사(오성희) 9개 단체 15명 참석

**[논의]**

1. 공적연금 정세 대응
2. 기타

**■ 연금행동 6/4  
집행위원회 회의**

6월 4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3층 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정용건), 한국노총(유정엽 정책실장), 행정부공무원노조(오성택 위원장), 공공운수노조(박해철 부위원장, 박지영 국장), 노동자연대(최영준 운영위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초원 연구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김동현 국장), 철도노조(신동호 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김손경미),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사무국장(구창우), 총괄간사(오성희) 10개 단체 14명 참석

**[논의]**

1. 향후 공적연금강화 활동계획
2. 기타

**■ 연금행동  
집행위원회\_정책위원회  
워크숍**

6월 18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참석]**

집행위원장(정용건), 정책위원(이찬진, 이희우, 이병무, 정승일, 이은주), 민주노총(신석호 국장), 공공운수노조(박해철 부위원장), 노동자연대(최영준 운영위원, 신정환),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최은별 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최원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김동현 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정문자 공동대표, 김손경미), 참여연대(김남희 팀장, 김잔디 간사),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사무국장(구창우), 총괄간사(오성희) 9개 단체 22명 참석

**[논의]**

1. 상반기 공무원연금개혁과정 평가
2. 하반기 공적연금 강화 주요 의제 및 쟁점
3. 하반기 사업계획(안)
4. 삼성-엘리엇 분쟁 대응 관련
5. 기타

**■ 연금행동 8/11  
집행위원회 회의**

8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공무원노조 7층 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정용건), 공무원노조(이재섭 사무처장), 노동자연대(신정환), 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초원 연구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운영위원장, 오유진 사무처장), 철도노조(김용식 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김손경미), 한국여성민우회(최원진),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사무국장(구창우), 총괄간사(오성희) 8개 단체 12명 참석

**[논의]**

1.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및 사회적 기구 대응
2. 8월 연금행동 월례포럼
3. 교육선전 사업계획에 관한 건
4. 정책위원 추가 선임에 관한 건
5. 기타

**■ 연금행동 9/3  
집행위원회 회의**

9월 3일(목) 오전 10시  
공무원노조 7층 회의실

**[참석]**

집행위원장(정용건), 민주노총(신석호 국장), 공무원노조(이재섭 사무처장), 공공운수노조(박해철 부위원장), 국민연금지부(최강섭 수석부위원장), 노동자연대(신정환),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오유진 사무처장), 철도노조(신동호 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김손경미), 참여연대(김남희 팀장), 사무국장(구창우), 총괄간사(오성희) 10개 단체 13명 참석

**[논의]**

1.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대응방향과 정책과제(안)
2. 홈페이지 시안 확정
3. 기타

**■ 연금행동 10/7  
집행위원회 회의**

10월 7일(수) 오후 12시 20분  
금산빌딩 1층 시원재

**[참석]**

집행위원장(정용건), 민주노총(신석호 국장), 행정부공무원노조(오성택 위원장), 노동자연대(신정환),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운영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최원진),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사무국장(구창우), 총괄간사(오성희) 7개 단체 10명 참석

**[논의]**

1.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대응
2. 기타

**■ 연금행동 11/4  
집행위원회 회의**

11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금산빌딩 1층 시원재

**[참석]**

집행위원장(정용건), 민주노총(신석호 국장), 공무원노조(박중배 사무처장), 철도노조(신동호, 김용식 국장), 국민연금지부(최강섭 수석부위원장), 노동자연대(신정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오유진 사무처장, 서성민 정책연구원장),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사무국장(구창우) 7개 단체 11명 참석

**[논의]**

1. 공적연금강화 특위 대응
2. 연금행동 반상근 활동가 채용
3. 기타



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으로, 공적연금으로  
2015년 연금행동 활동보고서

# 활동보고 | 13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3월 11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여는 말 |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각 단체 대표 발언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차옥  
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  
원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정책과제 발표 |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

실천과제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족선언문 낭독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강상준 서울북  
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김  
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

3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정문 앞

[내용]

“국민의 노후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물로 삼지마라”  
- 편향된 태도로 일관하는 새누리당 규탄 및 국민의 노후소  
득보장을 위한 논의 촉구 기자회견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최종진(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충재(전

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변성호(전교조 위원장), 이권능(복지국사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장), 김손경미(한국여성단체연합), 신정환(노동자연대), 신석호(민  
주노총 정책국장), 오성희(공무원노조), 사무국장 등



[내용]

“국민의 노후를 팔아먹는 정치야합 시도, 연금개혁 도미노의  
악순환 이제는 끝내야 한다”

[공동주최]

연금행동, 정진후 의원실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최종진(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변성호(전교조 위원장), 이명식(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영균(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염성태(노후희망  
유니온 위원장) 등

■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

3월 26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연금행동\_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단 면담**

3월 26일(목) 오전  
11시 30분 ~ 12시 40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공무원연금과 청년  
공개토론회**

4월 1일(목) 오후 4시 30분  
숙명여대 진리관

**[내용]**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안 발표에 대한 항의 및 국민 노후에 대한 개선 조치 촉구 등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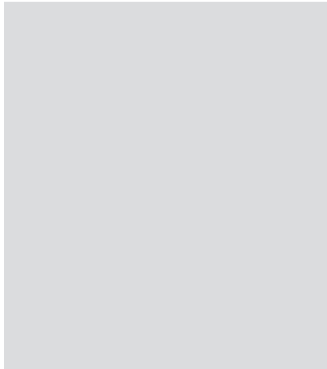
새정치민주연합 |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연금행동 | 정용건 집행위원장, 최종진(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충재(공무원노조 위원장), 변성호(전교조 위원장), 이명식(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영균(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엄성태(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 등



제목 | “우리 지금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봐도 될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청년이 묻고, 전문가가 답합니다.

강사 | 유희원 박사(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공동주최 | 참여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금행동



■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  
4월 6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내용]

“정부와 여야는 국민연금을 정상화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라!”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정보훈(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  
4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내용]

“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으로, 공적연금으로”

- 연금개혁 실무기구 들러리 운영 규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촉구

[공동주최]

연금행동,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이충재(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변성호(전 교조 위원장),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최준식(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영균(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등



■ 전국 동시다발  
공적연금강화 1인 시위  
및 인증샷

4월 23일(목)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

4월 25일(토) 오후 2시  
서울광장



### ■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

4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정문 앞

#### [내용]

“더 이상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 박근혜정부 공적연금강화 무대책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 [공동주최]

연금행동,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최종진(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충재(전  
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용섭(전교조 부위원장), 김영균(국민  
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최  
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등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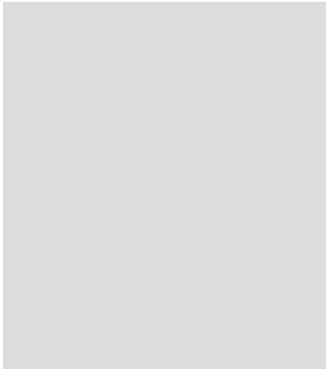
“공적연금 왜곡하고 국민노후 파탄내는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  
고, 문형표 장관은 사퇴하라!”

####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박해철(공공운  
수노조 부위원장), 김영균(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김병국(노년  
유니온 부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문유  
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용섭(전교조 부위원  
장), 김영균(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차영순(공무원노조 민중행  
정실장), 김용식(철도노조 대협국장) 등

### ■ 공적연금 왜곡, 국민노후 기만 규탄 기자회견

5월 18일(월) 오전 1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긴급토론회**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5월 21일(목) 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좌장**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

- 박근혜 정부의 연금정치 비판과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과 그 방향

**토론** |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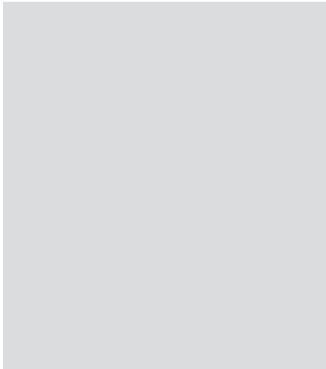


**■ 공적연금 훼손, 당사자 동의없는 법안통과 중단 촉구**  
**기자 회견**

5월 27일(수) 오후 2시  
 국회정문 앞

**[내용]**  
 “공적연금 훼손하고 당사자 동의없는 법안통과 중단하라”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변성호(전교조 위원장), 최강섭(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신동호(철도노조 정책국장) 등



사회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부교수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서 인구투자의 효과분석

토론 |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이권능 복지국가소사  
 이어티 연구실장

■ 연금행동 1차 정책포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적 투자 모색

7월 9일(목)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논평 발표

“국민노후를 위협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7월 20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기금운용체계편 토론회  
 개최 관련 논평

■ 성명 발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8월 5일 |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구 구성 촉구 관련 성명

<p><b>■ 성명 발표</b></p>	<p>“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평가방식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p> <p>8월 14일   기재부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방식 변경 관련 성명</p>
<p><b>■ 성명 발표</b></p>	<p>“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p> <p>8월 27일   홈페이지 인수 참여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 철회 촉구 성명</p>
<p><b>■ 연금행동 2차 정책포럼 공적연금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b></p> <p>9월 7일(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p>	<p>사회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p> <p>발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li> <li>2)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와 요구</li> </ol> <p>토론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p> 
<p><b>■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과제와 요구 발표 및 논의 촉구 기자회견</b></p>	<p>[내용]</p> <p>“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빈곤 방지하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li> <li>-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li> <li>- 연금행동,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3대 요구 10대 과제 발표 -</li> </ul>

9월 8일(화)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

[참석]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두환(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중남(공무원노조 비대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해철(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영균(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등



■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

9월 14일(월) 오후 7시  
마포 진주식당

[내용]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관련 기자간담회”

- 연금행동 3대 요구 과제 및 세부사업계획 설명 등

[정책설명]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김연명 교수, 김우창 교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신석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구창우 사무국장, 오성희 사무국간사 등



**■공적연금강화 특위 및  
사회적기구 1차 공청회**

10월 2일(금) 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

**주제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진술(발제)**

- 1) 공적연금 보장성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조정의 타당성 검토 (원종욱\_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에 관한 의견 (전병목\_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3)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소득상한 조정안 검토 (정해식\_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4) 한국의 노인빈곤과 국민연금 저연금 문제 (주은선\_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적연금강화 촉구  
연금행동\_청년\_공무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10월 7일(수) 11시  
국회정문 앞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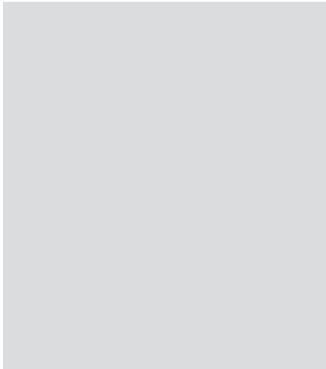
“반드시 국민연금 급여율 올리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공동주최]**

연금행동, 공무원단체(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 청년단체(KYC 청년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중남(전국공무원노조 비대위원장), 오성택(중앙행정기관노조 위원장), 김병국(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주제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진술(발제)

- 1) 실질적 사각지대외 급여 사각지대 (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 2) 공적연금 사각지대 관련 논의사항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 3)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대책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 4)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방안 -연금급여측면을 중심으로 (이정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적연금강화 특위 및 사회적기구 2차 공청회

10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



■성명발표

“국민노후를 절벽으로 끌고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즉각 중단하라!”

10월 21일 | 복지부장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입장 표명에 대한 비판 성명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기자회견**

10월 22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내용]**

“100만 공무원이 지켜본다. 국민연금 급여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공동주최]**

연금행동, 공무원 단체(공무원노조, 공노총, 중행노조)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김주호(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오성택(중앙행정부기관노조 위원장), 김용익의원, 홍종학 의원 등



사회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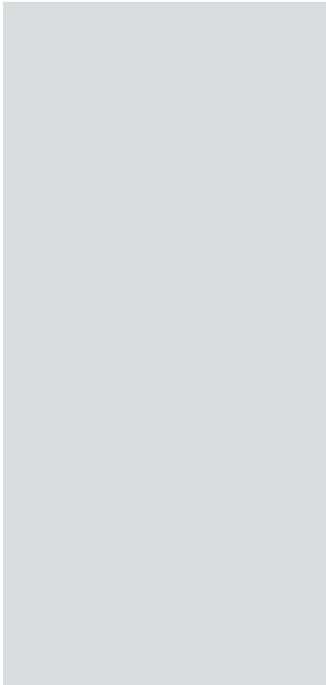
인사말 | 강기정, 홍종학, 남인순 의원

**사례발표 |**

- 1) 법.제도적 배제사례: 사무금융연맹 보험모집인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3국장
- 2) 사업장지원기준 악용에 의한 배제사례: 안산공단 파견노동자
- 3) 현장에서 악용으로 인한 배제사례: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
- 4) 영세 자영업자사례 :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 5) 사회구조적 배제사례: 청년 (대학생), 노인 (노년유니온)
- 6)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10월 27일(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사회적기구 무력화,  
노후빈곤 외면하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11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내용]

“사회적 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공동주최]

연금행동, 사회적기구 위원(권문일, 김연명, 문유진, 정용건, 정혜경, 최두환)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사회적기구 위원(최두환, 정혜경, 문유진), 남인순 의원 등



■ 한국 스칸디나비아 학회  
쟁점토론회

11월 6일(금)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발제 |

- 1)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 스웨덴 모델의 변화 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
- 2)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

종합토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이창근 (민주노총),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연금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내용]

“국민대타협기구, 사회적기구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공동주최]

연금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김주엽(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박원석 의원 등

■ 국민대타협기구,  
사회적기구 부인하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11월 24일(화) 오전 10시 45분  
국회 정론관



<p>■ <b>성명 발표</b></p>	<p>“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p> <p>11월 25일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 활동 종료 관련 성명</p>
<p>■ <b>성명 발표</b></p>	<p>“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라”</p> <p>12월 5일   노동개약 중단 및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강제 체포영장 비판 연대 성명</p>
<p>■ <b>논평 발표</b></p>	<p>“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p> <p>12월 14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 관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낙하산 인사 반대 논평</p>
<p>■ <b>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b></p> <p>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앞</p>	<p>[내용]</p> <p>“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p> <p>[참석]</p> <p>정용건(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전호일(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최준식(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최강섭(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신동호(철도노조 정책국장),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신정환(노동자연대) 등</p> 

■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릴레이 성명

“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12월 16일 | 참여연대 논평

“문형표는 살리고 국민은 죽어도 좋은가?”

12월 16일 | 공노총 성명

“‘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약이다.”

12월 16일 | 공무원노조 논평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자격자 내정,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12월 17일 | 공공운수노조 성명

청와대는 국민 노후에는 관심이 없단 말인가?

12월 20일 | 민주노총 성명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내정이 웬 말인가?”

12월 21일 | 한국노총 성명

■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기간 | 12월 22일~31일

장소 | 국회, 청와대, 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기간 | 2015.12.21.~2016.1.8.

결과 | 3,000명 목표. 최종 2,366명 78% 달성

■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 반대  
다음 아고라 청원



**세대간 도적질.보험료 폭탄론  
국민연금 불신조장.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이사장 자격없다!**

**메르스사태 무능대응으로 경질**

“첫번째 환자가 입원해 메르스가 확산된 병원을 휴원 조치한 상황에서 해당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2015. 5. 31.

“어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특정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 2015. 6. 2.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 530건!**

“KD재직 당시 2008년~2013년 아들생일과 배우자 생일에 총8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고급 호텔과 일식집 등에서 식사”

**보험료 두 배 인상.세금폭탄, 국민연금 불신조장!**

“국민연금 지속위해 보험료를 인상 불가피” 2013. 11. 1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반대” 2015. 5. 2.

“연금 기금을 고갈시켜 다음 세대에 빚을 넘기는 건 세대 간 도적질” 2015. 5. 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올리려면 보험료 2배 인상, 1700조 세금폭탄” 2015. 5. 7.

**■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

**[내용]**

-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공사반대! -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호일(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최준식(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최강섭(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신정환(노동자연대) 등



**■ 성명 발표**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12월 31일 |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에 대한 비판 성명



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으로, 공적연금으로  
2015년 연금행동 활동보고서

# 활동자료 | 37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제안배경

- 2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012년 10월 “가입자와 함께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기치로 발족한 이후, 노후의 빈곤예방과 노후생활 보장, 가입자 중심의 기금운용 등 다양한 연금개혁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 그러나 우리의 노후는 여전히 불안하고, 암울합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독보적인 1위이고, 고령자의 소득수준이나 소득불평등도 최하위권입니다. 2017년 우리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노후문제가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믿고 기댈 건 공적연금밖에 없지만, 이마저 매우 취약합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 40%까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20%수준에 불과해 ‘용돈연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마저 많은 이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A값의 10%) 주겠다는 대선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갈수록 급여의 보편성과 적절성이 훼손되는 형태로 도입됐습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의 인식이나 대응은 부실하다 못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일관된 기조 하에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거부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산적한 개혁과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고갈, 세금폭탄’ 등 악의적인 선동만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서의 재정적 책임을 회피한 채, 노후소득 유지기능 축소 및 퇴직연금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기반을 축소하고 공무원의 노후보장에도 시장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개악하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 이러한 전략적 정책 기조 하에서 퇴직연금은 5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했고, 개인연금 역시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GDP의 30%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또한 사적연금과 별다른 것 없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오로지 수익률 중심으로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와 빈곤예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시장을 위한 ‘판돈’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낡은 교본에 따른 정책기조가 우리 사회에 그대로 유지되는 한, 노후빈곤과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제 우리의 대응 역시 제도적 수준의 개별적 대응을 벗어나 종합적 관점에서의 대안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노동, 농민, 여성, 시민사회 뿐 아니라, 청년, 노인 등 세대별 대표단체가 함께 참여해 많은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활동의 성과를 이어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의 권리, 존엄, 그리고 빈곤예방 및 소득보장을 위한 상설연대체로 확대재편하려고 합니다.

### 2015.3.1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새로운 국민연금운동을 시작하며.

노후의 존엄과 권리,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대와 실천으로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100세 시대'라는 말처럼, 퇴직 후에도 2~30년 이상의 노후 시기를 보내야 한다. 과연 우리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실은 암울하다 못해 절망적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2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49.3%). OECD국가평균(12.4%)보다 4배가 넘는 독보적인 1위다. 고령자의 소득수준과 소득불평등도 최하위다. 가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르신들의 비율도 가장 높다. 그리고 삶의 막바지까지 저임금과 불안한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노후 문제는 현세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도 많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여성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실직과 휴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도 560만 명이 넘는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년 가입 기준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가입기간을 감안하면 2040년이 돼도 실질급여액은 21.8%에 불과하다. 평균소득이 350만원인 사람이 20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5년 기준 약 61만 7천원)에도 못 미치는 약 58만 4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이 도입됐지만, 대선공약과 달랐다.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의 '적절성'과 '보편성'이 훼손되는 형태로 도입됐다.

그나마 믿고 기댈 건 공적연금밖에 없지만, 정치권은 공적연금에 대한 개악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노후의 빈곤예방이나 소득안정보다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이러한 개악은 공적연금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불안한 노후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재정고갈, 세금폭탄' 등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국가책임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있다. 낮아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단순 형평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특히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후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루는 것을 전제로 구성됐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이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정치에서는 단 한 차례 이런 기본적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2007년 국민연금 개악과 2014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과 기초연금 공약파기 모두 기만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역시 이러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정책은 개별적, 제도적 수준을 넘어 전략적 차원에서 ‘공적연금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5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했고(약 107조원), 개인연금 역시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다(약 264조원). GDP의 30%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또한 사적연금과 별다를 것 없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오로지 ‘수익률至上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와 빈곤예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시장을 위한 ‘판돈’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낡은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노후 빈곤과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부양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노후 문제를 개인이나 시장에게 맡겨둘지, 아니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지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노후의 존엄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국제노동기준과 인권조약에 기반한 기본적 권리이다. 모든 국민이 적절한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12년 “가입자와 함께하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기치로 발족한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으로 확대 재편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노동·농민·빈민·여성·청년·노인·장애·학생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는 공적연금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써, 이제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대와 실천을 함께 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5. 3. 1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식 참여자 일동

2015.3.18.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기자회견

“여·야·정은 더 이상 국민의 노후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물로 삼지 마라”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을 계기로 우리나라 공적연금 전반의 수준을 논의하도록 만들어진 협의기구로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노후소득보장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각 분과는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보장수준, 재정추계과정의 재검증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타협기구는 적정 노후수준에 대한 논의는 커녕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재차 강조하고 있어 대타협기구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연금행동은 이러한 과정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연금개혁과정을 보자.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용돈연금으로 전락하였고 2014년 기초연금 개혁은 애초 약속과 달리 노인빈곤을 해소하기는커녕 국민연금 급여수준과의 연동으로 기초연금의 노인 소득보장수준은 크게 축소되었다.

실질 소득대체율을 감안하면 향후 30년 후에도 국제기구에서 정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도 못 미칠 것이 예상되는 등 국민의 노후 생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연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3차례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39.8%로 최소 수준을 겨우 충족한 상태일 뿐이다.

그럼에도 국민대타협기구는 애초 제기된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는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안만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들인 공무원의 노후마저 외면하는 대한민국정부를 과연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대타협기구 종료를 불과 열흘 앞 둔 시점에서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합의는 커녕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 여야는 여전히 또 다시 연금개혁을 야합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

20만원 기초연금을 주어도 폐지로 생계를 연명하는 노인들을 보고 자라는 청년들이 어떻게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연금행동은 또 다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연금개혁...

이를 빌미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부와 여.야는 어렵게 모인 자리인 만큼 책임있는 자세로 전 국민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수준 논의에 임하고 향후 더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상설노의기구를 구성하여 더 이상 빈곤한 노인이 방치되지 않는,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5. 3. 1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2015.3.26.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팔아먹는 정치야합 시,  
연금개약 도미노의 악순환 이제는 끝내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다시 한번 지난 국민연금개약과 기초연금 개약의 악몽을 떠올리며 헌신 짝 버리듯 버려질 국민의 노후앞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대타협기구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인 어제 (3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의 재구조화 모형'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안을 공개하였다. 대타협기구가 운영되는 동안 각 이해당사자들이 확인한 것은 명확한 입장 차이와 해석의 차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단체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개함으로써 대타협기구의 합의정신을 팽개쳐 차이를 좁히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공무원 단체들은 물론 민주적인 마무리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개혁,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그리고 2014년 기초연금도입 과정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된 연금개약 역사를 지나오면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참담한 축소를 경험하였다. 지금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은 2009년 연금개혁당시 향후 10년간 개혁은 없을 것이라며 희생했던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시 한 번 공무원의 고통분담만을 요구하며 용돈연금 수준인 국민연금으로 하향 평준화음모에 다름아니다.

지금까지 연금개혁과정은 형식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다 마무리는 늘 정치권의 야합과 몰아치기식 합의 강요였고, 여야는 항상 국민이 합의한 연금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방식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미 연금행동은 3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타협기구를 무력화 해 정치야합의 들러리로 만드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원내 최대 야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마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우리는 또 다시 국민들의 노후생존권을 걸고 반복되는 여야의 야합시도에 분노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변화된 자세로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말처럼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인 국민의 노후생존권을 시한을 정해 자기들만의 합의로 밀어붙이려는 연금개혁 반대한다!

당사자와 정부 간 합의와 적정노후소득대체율 합의 없이 연금개혁 논의하지 않겠다던 새정치민주

연합은 연금개혁안 철회하라!

대타협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연금개악만 시도하는 새누리당과 정부 규탄한다!

국민들의 걱정 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당사자 합의 없이 여야 원내대표 임기에 맞춰 추진하는 연금개악 반대한다!

2015. 3. 26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2015.4.6.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는 공적연금으로, 국가책임으로  
“정부와 여야는 국민연금을 정상화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라!”

국민대타협기구가 종료된 지 9일이 지났다.

또한 여야는 지난 목요일 특위 시한을 25일 연장하고 실무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논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후소득 수준과 보장실태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많은 한계를 보이면서 어떤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였지만 우리의 공적연금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와 노인 자살율 1위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턱 없이 낮다.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대체율과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전체 가입자의 27%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에 배제되어있고, 국민연금제도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80년이 되어도 여전히 현재와 같은 24%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논의 과정에서 두루누리 사업과 크레딧 제도의 확대가 마치 공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의 보완책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5천여억의 예산을 들여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한다 해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크레딧 제도는 제도유지를 위한 재원마련대책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미 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속에서 크레딧 제도를 통해 올릴 수 있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고작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여당이 공적연금강화에 미온적인 것을 넘어 공무원연금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연금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대타협기구의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참여했던 공무원단체들은 국민들의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을 주요 의제로 가져갔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실질 소득대체율 향상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은 물론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의 간극을 줄이지 못한다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수준이 심각함을 확인하고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실무기구 의제에 포함시킨 것은 그나마 빈손에 가까운 대타협기구 운영의 중요한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빈손’종료라는 오명을 쓴 대타협기구와 다를바 없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로만 한정되어 다시 한 번 국민의 노후생존권을 외면한다면 90일간 짧지만 치열하게 논의했던 대타협기구의 그나마의 성과조차 부정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향방은 실무기구 운영에 달려있다.

정부와 여야는 대타협기구 최종 결과 보고문에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 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특히 야당은 2007년 국민연금 개악과 2014년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의 범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이번야 말로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실무기구가 대타협기구 운영 과정상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가장 큰 전제이자 쟁점이었던 적정 소득대체율은 물론 이를 위한 실현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큰 과제를 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가 실무기구를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처리만을 위한 형식적인 들러리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연금행동은 전체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 4. 6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5.4.23.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는 정치야합이 아닌 사회적 논의만이 유일한 길이다.  
정치야합시도 즉각 중단하고 공적연금 강화에 확답하라!”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대타협기구를 거쳐 실무기구까지 약 4개월여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당장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의 빛이 늘어나 국가가 망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면서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하여 지속적으로 사회갈등을 유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사회적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정부와 여당의 신뢰를 깨는 온갖 공세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왔다.

공투본은 이번 연금 논의에서 턱없이 낮은 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연금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강화 없는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혁은 수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보수현실화, 노동기본권 보장,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직역연금의 운영방향에 대한 원칙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공적연금강화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107만 공무원과 전체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일 뿐이다.

5월 2일 특위만을 염두에 둔 채 정부와 여당은 대타협기구의 합의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실무기구에서조차 압박과 밀어붙이기로 일관하여 실무기구조차 들러리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다.

특히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하여 김무성 대표는 곳곳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만을 외치더니 급기야 국회 앞 계단에서 의원들을 동원하여 ‘공무원연금개혁 5월 2일까지입니다’라는 비상식적이 퍼포먼스까지 벌이기에 이르렀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부정부패로 점철된 이 정권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공적연금강화나 축소냐의 갈림길에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은 단 몇 달만의 논의로, 더욱이 정치적 야합으로는 더더욱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공적연금 강화

를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공투본과 연금행동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공투본과 연금행동의 국민연금 정상화 요구에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있는 자세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합의기구의 단순한 구성뿐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으로 담보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협박으로 공무원단체를 위협하고, 모든 책임의 원인이 공무원에게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여 국민과 공무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제출해야 할 것이다

2015. 4. 23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2015.4.25. 국민대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대선언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대선언

- 우리의 연대와 실천으로,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다.

어떤 권력도 이런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권한이 없다.

오늘 우리의 선언은 더 이상 노후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다.

오늘 우리의 외침은 끊임없이 공적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에게 보내는 강력한 국민의 경고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투쟁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공적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나라 연금개악은 정치권 주도로 이뤄진 야합의 역사였다. 더 이상 국민의 노후를 정치권에게 맡길 수 없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당연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연금개악의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다. 공적연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농간에 계속 현혹된다면, 국민의 노후는 영원히 금융시장의 포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빼앗긴 연금주권을 되찾고, 공적연금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역할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 개악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개악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전략적 기조 하에 추진돼 오고 있다. 90년대 국제금융기구의 낡은 주장이 여전히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으며,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악은 아직 전초전일 뿐이다. 제도별, 사안별, 시기별 차원의 개별적 대응을 극복하고, 이에 맞선 우리의 전략과 대안 역시 '공적연금 강화'가 핵심임을 분명히 한다.

**셋째,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히려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 저임금·비정규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과 빈곤노인에게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인 기초연금은 '짜퉁'으로 만들어버렸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해야한다는 당연한 사실조차 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연금 역시 '세금폭탄' 운운하며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넷째, 공적연금을 상향 평준화 해야 한다.** 연금의 목적은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금제도의 애초 목적과 취지를 위배한다면, 그 어떤 말로 현란하

게 포장된 “개혁”이라도 개혁일 뿐이다. 공무원·사학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 이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우리의 전제다.

**다섯째,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개혁은 곧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과 맞닿아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판단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자본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노후를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노후소득의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마저 사적시장의 논리와 원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가입자대표의 감시에서 벗어나 금융전문가에게 맡기는 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국민의 노후를 위한 대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세대갈등·사회갈등 조장에 사회연대로 맞설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세대갈등·사회갈등을 부추겨왔다. 국민연금 급여를 삭감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자극적인 선동은 공무원연금에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 용돈수준으로 낮아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구분해 2014년 기초연금을 개혁하고, 다시 ‘형평성’을 근거로 공적사회와 시민사회를 이간질하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하고 있다. 이런 편협한 태도가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간교한 책동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연대로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4/25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를 한국 연금개혁 운동의 새로운 실천적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공무원·교원 노동자는 직종과 연령, 성별의 차이를 넘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2015년 4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및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 참여자 일동

2015.4.28. 박근혜정부 공적연금강화 무대책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 박근혜 정부가 결단하라!”

불과 한달전인 3월 28일, 정부와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의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정부와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기여율인상과 지급율인하라는 고통분담으로 47%의 재정절감을 이루어냈음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은 실무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염원인 공적연금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논의는 뒷전인채 오직 공무원연금 개악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연금과 관련된 미래재정을 예측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재정추계를 악용하여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선인 소득대체율 40%에 겨우 근접하는 소득대체율 39.9%에 불과한 공무원연금마저 2007년 국민연금과 2014년 기초연금 개악처럼 반값연금으로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행동과 공투본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일방적인 삭감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로의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가 선결과제를 주장하며 대타협기구는 물론 실무회의를 통해 수차례 요구했고, 기자회견과 각종 성명 등을 통해 수십차례 밝혀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모든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는 커녕 대책조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중요한 해결과제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현실화, 노동기본권 보장은 물론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보완책은 입장조차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은 향후 20년 이내에 정부가 주장하는 수지균형시점이 도래하여 매년 부담하는 2조원의 정부보전금은 정부예산에서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지만, 이미 밝혀진 감사원 감사 결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인한 빚은 향후 지출될 34조를 포함하여 65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총 예산의 겨우 0.3%를 차지하는 공무원연금 보전금 지출 때문에 국가부도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당.정.청의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소환하여 자원외교라는 국책사업으로 날린 65조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제는 박근혜정부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할 때이다.

부정과 부패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이 정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4. 2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2015.5.18. 공적연금 왜곡, 국민노후 기만 규탄 기자회견

“공적연금 왜곡하고 국민노후 파탄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공무원연금개혁을 시작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공적연금 축소정책이 여야가 약속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청와대 발 흔들기로 날날이 폭로되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 국민연금을 이용한 후, 바로 이를 폐기 처분하려는 작태를 보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적연금강화 여야의 합의방안이 발표되자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기금고갈폭탄. 보험료폭탄. 세금폭탄’이라는 3종 폭탄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을 파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연금 축소정책을 통한 국민기만은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한 청와대의 대국민 협박성 선동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오락가락 행보로 정점을 찍고 있다.

청와대는 ‘1702조원의 세금폭탄’, ‘재앙에 가까운 미래세대 부담’, ‘내년에만 1인당 209만원 추가 보험료’ 등 온갖 선정적이고 왜곡된 논리를 퍼내며, 국민정서를 자극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논의를 차단시키고 있다. 문형표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발표되자 처음 보험료 인상 두 배 인상을 제기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고, 이어 ‘후세대 도적질’ 발언을 통해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를 통째로 불신으로 몰고 갔다.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 주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막겠다는 정략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1/3이나 삭감시킬때는 국민들은 배제한 재정차함으로 처리하더니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니 무슨 궤변이란 말인가!

현재에도 48%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물론 고용불안정과 저소득의 고통에 시달리는 현세대의 노후생존권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근거도 없는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통한 공적연금강화를 하루아침에 뒤엎으려고 시도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세대 간 도둑질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모욕하고 공적연금축

소를 선동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세대간 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왜곡과 불신조장을 중단하고,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5. 1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2015.5.27. 공적연금 훼손 규탄, 당사자 동의없는 법안 통과 중단 촉구 기자회견

“공적연금 훼손하고 당사자 동의 없는 법안 통과 중단하라!”

여야는 5월 28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당사자 동의 없는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 2009년에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연금은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본연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두 차례 인하로 거의 반 토막 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짝퉁 기초연금의 도입, 공무원연금의 연이은 축소는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공적연금제도의 존립을 흔들고 있다. 공적연금의 약화는 전 국민의 노후를 국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고, 노후생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해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연금 법안 통과 중단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이해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연금 법안 통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공무원연금 법안은 오직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사용자로서의 국가책임은 회피하고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사회적 논의도 넉 달 남짓에 지나지 않아 수 년에 걸쳐 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설득을 중시하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애초 이해당사자가 동의하는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가 없다.

또한 연금행동은 5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정부의 도가 넘는 국민연금 불신 조장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1702조원 세금 폭탄” 등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논리가 횡행했다. 공무원·교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공무원연금 축소도 부족해서 다시 국민연금제도를 흔드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 불신 조장에 앞장 선 문형표 장관은 사퇴하고 청와대는 사과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사회적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일부 학자들이 이해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정도로만 치부하는 것은 황당하다. 권고문에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이 국민들의 연금불신을 심화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들 역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강조컨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의제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ECD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 부끄러운 자화상이 오늘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대량 노인빈곤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야 정치권은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

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무원연금이 삭감되고 국민의 노후가 험신짝처럼 버려지는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 어느 국민들보다 불행한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는 공무원연금 법안 통과 중단하고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 5. 27.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2015.7.20. 보사연 기금운용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관련 논평

“국민노후를 위협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또다시 정부와 금융자본의 판돈으로 내몰리려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1일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명분으로 현재 가입자대표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다. 개편안은 보사연이 주도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된 것인 만큼 복지부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번 개편안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채우고, 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야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개편안대로 할 경우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기금운용의 정책방향과 책임성이 금융전문가와 복지부에 좌우되어 사회적 견제장치는 완전히 제거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자본화하고, 주식·부동산 시장 부양 등 정부 경제정책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개편안의 명분으로 기금수익을 높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거짓에 가깝다.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전적으로 맡긴다 해서, 또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해서 현재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사연은 수익률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를 2.5%p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김우창,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2015.7.9.)

가. 확률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향후 40년 기준)

<b>초과수익</b>	<b>1%</b>	2%	3%
<b>달성확률</b>	<b>5.7%</b>	0.079%	0.000001%

※ 가정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 = 4%

나. 실증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b>1년간</b>	<b>5년간</b>	<b>10년간</b>	<b>20년간</b>	<b>30년간</b>
<b>시장평균+1%p</b>	<b>11.0</b>	<b>2.1%</b>	<b>1.0%</b>	<b>0.6%</b>	<b>0.4%</b>
시장평균+2%p	5.1%	0.6%	0.1%	0.0%	0.0%
시장평균+3%p	3.3%	0.1%	0.0%	0.0%	0.0%

※ 지난 30년간(1985~2014)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데이터 조사

오히려 고위험 추구로 인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1%p 초과수익 추구 시 변동성은 약 3배(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배(0.05%→10.42%) 이상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2008).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다행히 두 번의 금융위기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익률 평균
국민 연금	한국 NPS	-0.1	12.0	8.1	7.9	8.6	5.4	5.9	7.0	-0.2	10.8	10.6	2.3	7.1	4.2	6.33
	일본 GPIF	-5.7	-2.5	-8.5	8.4	3.4	9.9	3.7	-4.6	-7.6	7.9	-0.3	2.3	10.2	8.6	1.61
	캐나다 CPPIB	-9.4	3.4	-21.1	31.7	10.7	17.4	12.9	-0.3	-18.6	14.9	11.9	6.6	10.1	16.5	5.22
	스웨덴 AP3	-	-4.4	-12.4	16.4	11.4	17.9	9.7	5.1	-19.7	16.4	9.1	-2.4	10.7	14.2	4.52
공무원 연금	미국 CalPERS	-7.2	-6.1	3.7	16.6	12.3	11.8	19.1	-5.1	-24.0	13.3	21.7	0.1	13.2	18.4	5.45
	네덜란드 ABP	3.2	-0.1	-7.2	11.0	11.2	12.8	9.5	3.8	-20.2	20.2	13.5	3.3	13.7	6.2	5.29
국부 펀드	노르웨이 GPF	2.5	-2.5	-4.7	12.6	8.9	11.1	7.9	4.3	-23.3	25.6	9.6	-2.5	13.4	15.9	4.99

주 : 1. 각 연기금 수익률은 대외 공시기준 최초년도부터 작성되었음  
 2. NPS, AP, ABP, GPF는 당해연도 12월, GPIF, CPPIB는 익년 3월, CalPERS는 익년 6월 결산기준  
 3. ABP는 2008.3월부터 APG(All Pension Group)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업무를 APG로 이전함  
 4. 스웨덴 AP는 2001년부터 AP1~AP4의 펀드로 균등 배분되어 경쟁적인 구조로 운용됨  
 자료 : 각 연기금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참고

요컨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고수익 추구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발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매진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현재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의 대표성이 강조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포함한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등 상시적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보사연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며, 대부분 해외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역시 사회적 합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470조, 향후 수 천조에 달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대표성이 전혀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자 대표의 의사결정을 실무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복지부였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형식적이고 제한된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 온 것도 복지부였다. 문제는 ‘가입자의 대표성’이 아니라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인’하려는 행태다.

또 보사연이 거대 기금을 운용하기에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및 조직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

한 것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측면이 크다. 보사연은 캐나다 CPPIB에 비해 기금 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 수는 1/5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제고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인력 규모는 위험자산이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위탁자산에 대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CPPIB는 다른 세계 연기금에 비해 운용인력이 매우 많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구분	자산규모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	기준일
일본 GPIF	1,270조원	85명	14.94조원	2015.3월말
국민연금공단	470조원	212명	2.21조원	2014년말
노르웨이 NBIM	932조원	428명	2.18조원	2014년말
캐나다 CPPIB	230조원	1,000명	0.23조원	2015.3월말
미국 CalPERS	324조원	341명	0.95조원	2014.6월말
네덜란드 ABP	434조원	650명	0.67조원	2013년말
한국투자공사	93조원	163명	0.57조원	2014년말

2014년 회계기준으로 CPPIB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5,100억원에 이른다. CPPIB를 벤치마킹해 운용조직을 만든다면 연간 관리운영비만 1조원 이상이 넘는 공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가? 참고로 기금운용본부의 2013년 관리운영비는 약 347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운용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실익 없는 공사설립보다 지금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의 인력과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자금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전제 하에서 전문성과 고위험성 추구가 아닌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첫째,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정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연착륙해야 할지, 천문학적으로 기금을 계속 쌓아갈지 논란이 분분하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장기 재정목표의 설정과 기금운용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지금의 개편 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배구조만 바꾸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자산 차원을 넘어 사회적 투자에도 활용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위험한도와 적정한 목표수익률이 정해질 수 있다.

둘째,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개편안은 오

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운용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현재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정당성이 없는 정부위원의 축소, 대표성을 결여한 일부 가입자대표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입자대표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입자 대표의 책임성 역시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참여를 배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정부 경제정책에 활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시도는 반드시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5. 7. 2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 2015.8.5.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성명

###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세월아 네월아 한다. 지난 5월 29일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이하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결의된 날로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하여 노후빈곤 해소에 대한 대책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핑계였던 여당 원내대표 교체 논란, 메르스 사태도 일단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스스로 합의했던 일정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 공무원연금을 깎기 위해서는 하루 수백억 세금이 투입된다는 거짓과 겁박을 일삼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반면, 정작 대부분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논의에는 뒷짐이다. 뒷간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인가?

OECD 국가 내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문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깎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리고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빈곤에 허덕이고 견디다 못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분들이 존재한다. 진실로 급한 것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지금부터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가동해도 석 달이 채 되지 않는다. 활동 기한 연장을 감안해도 넉 달이 되지 않는다. 특히 9월 이후 국정감사에 들어가면 논의가 더 쉽지 않을 상황이다. 지금 당장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가동하여 국민연금을 올리고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개악 당시 그 보완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가 수년에 걸쳐 공전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럴 생각이면 오산이다.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꿈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코 좌시하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2015. 8. 5.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 2015.8.14.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평가방식 개악 중단 촉구 성명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평가방식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평가방식 개편안은 기재부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음 -
- 글로벌 연기금과의 비교는 생명보험사와 자산운용사를 비교하는 것과 동일한 무식한 발상 -
- 4년 연속 탁월하다고 평가해 놓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재부 평가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
- 인력, 조직, 예산을 통제하면서 기금운용집행조직의 독립성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자기모순 -
- 국민연금의 성과평가 관련 기재부 자산운용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비정상적 정상화 정책임 -

1.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통제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본색을 드러냈다. 12일 기재부는 국민연금 자산운용 평가개선에서 매년 평가하는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을 분리하여 글로벌 연기금과 단독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상대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아이비리그 대학의 대학생과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럴 듯 해 보이나 그 본질은 국가 재정전략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자 1998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이관된 국민연금기금의 통제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2. 기재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 개선방안은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재정전략협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 협의회는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구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이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전략협의회를 통해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을 경제정책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정책적 목적의 기금동원 의도이자 기금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처간 이전투구에 지나지 않는다.
3. 또한, 내용적 측면을 살펴봐도 문제투성이다. 따라서 개선방안이 아닌 개악안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방식의 변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비교대상이 잘못되었다. 개편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네덜란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CalPERS와 ABP,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을 분리해서 기금만 운용하는 캐나다 및 일본의 CPPIB와 GPIF와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한 국가연금인 국민연금은 직역연금, 국부펀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제도 시행부터 제도와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국민연금은 기금만 분리해서 운용하는 국가연금과의 비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자산을 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보험사와 자산운용사를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경영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력, 예산, 조직, 임원 인사권까지 통제하고 있다. 기금규모의 급속한 증가와 투자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기금운용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적정인

력의 확보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예산 확보는 기본이다. 수년에 걸친 기금운용전문 인력의 증원과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기재부가 자산운용조직의 수익률을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행한 무소불위의 통제권 행사를 망각하고 왜 이 정도의 성과밖에 내지 못했냐고 다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셋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산군에 대한 투자비중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수익률이 기금운용성과의 90% 이상을 좌우한다는 것은 일반적 사실이다. 주식 및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 호황기에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으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경우는 호황기에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불황기에도 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 낼 수 있다. 또한, 국가마다 운용스타일도 다르다. GPIF와 CalPERS처럼 위탁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나라는 있는가 하면, 자산의 약 80% 가량을 직접운용하는 CPPIB도 있다. 투자 철학도 상이하다.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내외 시장에서 알파추구전략을 구사하는 해외 연기금이 있는가 하면, 자국 내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시장중립적 투자를 운용원칙으로 삼고 있는 나라도 있다. 확정급여형 부분적립방식의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예정된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운용성과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처럼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잘못된 기금운용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자산배분, 운용스타일, 투자철학, 제도의 특성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익률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넷째, 선후가 뒤바뀌었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아니라 기금을 소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지시킬 것인지를 재정운영방식, 장기재정목표 수립, 제도와 기금이 해야 할 몫을 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이후에 기금운용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수익률과 전략적 자산배분의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청사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평가방식을 개편하는 것은 목적지 없이 비행기부터 타자는 것과 동일하다.

4.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재부의 기금운용평가단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실태 및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중복해서 평가를 해 온 것이다. 차제에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평가 단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금번 개편안은 국민연금기금이 규모가 작은 기금과의 평가하기 때문에 매년 “탁월 등급”을 맞고 있으므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야 한다는 7개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기재부의 평가는 의미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는 매년 복수의 평가전문기관이 수행하고 그 결과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성을 상실한 기재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일 것이다.

5.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금번 기재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방식의 개편안은 형

식과 내용 모든 측면에서 문제투성이인 졸작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당국의 통제력 강화 음모를 중단하고 국민연금의 자산운용평가 개편안을 철회하여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평가권을 기금운용위원회로 일원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8. 1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2015.8.27. 국민연금기금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 철회 촉구 성명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 매각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와 비밀 약정을 맺고 약 1조원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이려면 노동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칼날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모펀드의 기업인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부분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단기간의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에 그 목적이 있다. 곧 다시 팔아먹기 위해 인수한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단기간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 해고가 동반사 벌어진다. 정상적인 경영에는 관심이 없으니, 기업 활동과 발전의 핵심인 노동자의 생존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먹튀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05년 3월 설립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규모의 사모펀드 그룹 중 하나로 성장한 MBK파트너스는 이미 HK저축은행 인수, ING생명 인수 그리고 씨앤엠 매각등을 통해 이미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구조조정이 있었기에 그 우려는 더 크다.

특히 국내 3위의 유선방송 기업이었던 씨앤엠은 2008년 MBK 파트너스에 2조 5천억원으로 매각된 이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은 은행이자를 갚는데 사용되었고, 그만큼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하지않고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 대부분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등 노동조건의 엄청난 후퇴를 가져왔었다.

이런 자본에 우리나라 대표적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대상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노동, 윤리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으로, 공적연기금 투자의 기본원칙이다. 국민연금도 2009년 UN PRI(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하면서 이런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현재 48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은 사업장 가입자, 즉 노동자가 다달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이 돈이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고하는 것에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사모펀드들의 홈플러스 매각입찰 참여로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당장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기업·자본에 투자되지 않도록 환경·사회·노동·윤리를 감안한 명확한 투자가이드 라인을 제출하라!

또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투자 결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결정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연금행동은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항의면담,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요구는 물론 MBK파트너스의 주요한 투자자인 CPPIB(캐나다연금운용)에 우리의 우려를 표명한 서한을 발송할 것임을 밝힌다.

2015. 8. 27.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2015.9.8.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국민연금 급여수준(50%) 상향!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노후빈곤 방지하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
- 연금행동,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3대 요구 10대 과제 발표 -

지난 5월 29일 국회는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벌써 세 달이 지나도록 사회적 기구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활동시한이 10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해버리고 만 셈이다. 그나마 75일 만에 특위가 열렸지만, 이조차 두 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개최하고 다음 일정도 못 잡은 채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작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기구를 좌초시키려는 의도이며, 결국 노후빈곤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간끌기’로 사회적 기구 방치하며, 노후빈곤해소 외면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사회적 기구 구성이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오히려 ‘보험료 폭탄’, ‘기금고갈’, ‘후세대 갈취’ 등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해 왔다. 단지, 자신들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을 뿐, 애초 국민의 노후 문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갓은 핑계 대며 직무유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규칙에 따라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이번 사회적 기구와 특위는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의제로 다루도록 돼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가구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

는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매년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진다. 이조차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0%남짓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지어 이마저 저임금·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청년세대에게겐 여전히 문턱이 높다. 이번 사회적 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에 대한 자극적인 선동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새누리당은 악의적인 왜곡으로 제도불신과 세대갈등을 부추겨 왔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 '양당 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데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는 것으로 명문화시킨 바 있다.

만약 또 다시 이러한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다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06개 단체로 이뤄진 우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오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3대 요구 10대 과제를 공표하고, 오늘부터 특위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고, 노후 문제를 또 다시 총·대선 시기의 공허한 약속으로 넘기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면, 응분의 정치적 책임과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 9. 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2015.10.7. 사회적기구 활동 관련 연금행동, 공무원노조, 청년단체 기자회견

“반드시 국민연금 급여율 올리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4개월여 만에 늦게나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와 사회적기구’(이하 ‘특위’와 ‘사회적 기구’)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10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9월 16일이 되어서야 출범된 기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까지 보여주는 태도는 실망을 넘어기가 찰 지경이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는 정부와 여야가 공무원단체들, 국민들과 약속한 것임에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다.

9월 16일과 23일 진행된 사회적 기구 전체회의에서 여당측 위원들과 복지부는 OECD에서 압도적 1위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통계를 부정하고,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 않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선동적인 발언만 일삼고 있다.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공적연금 범주에 포함되지도 않은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정규, 특수고용, 일용직 노동자의 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했다고 자화자찬 했던 497조의 20%는 약속했던 대로 명백하게 청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노동자 및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책임부처인 복지부와 노동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활용 계획은 전혀 내놓을 생각도, 의지도 없다. 말 그대로 ‘먹튀’ 행각을 정부는 보이고 있다. 사회적 기구에서 보여주는 정부의 무책임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합의사항이었던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단체들간의 교섭기구를 운영하는데, 정부는 공무원연금 교섭파트너였던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적지위를 문제삼아 배제하고, 오히려 노조사무실 폐쇄조치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벌이고 있다. 이는 결국 모든 합의는 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임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당장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100만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개선안을 마련하라.

비정규직과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은 젊어서는 워킹푸어, 늙어서는 빈곤한 노후로 절망

하고 있고 현 세대의 노인빈곤 문제 또한 자살을 1위의 오명처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만큼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청년들은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쉬운 해고를 통한 일자리를 바라지 않는다. 청년들도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안정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규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인들도 반쪽짜리 기초연금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생활이 가능한 공적연금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실질적인 은퇴연령이 71세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에 기대거나 그게 싫으면 늙어도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하는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한다.

노인세대는 물론 청년세대까지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할 일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초연금 강화, 영세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상향이다.

국민과 약속했던 대로 반드시 국민연금 급여율을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지금처럼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인빈곤 현실을 부정하고, 방치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노인.공무원단체 및 연금행동 306개 단체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 10.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의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KYC청년연대, 민달팽이 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015.10.21. 복지부장관 기금운용본부 공사 추진 비판 성명

“국민노후를 절벽으로 끌고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즉각 중단하라!”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둘러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내의 문제가 보건복지부의 개입으로 기금운용공사 설립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20일(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단이사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정부의 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기금운용본부장의 비연임을 통보한 것이 공단 이사장의 월권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법에도 공단의 상임이사(기금운용본부장 포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돼 있긴 하나, 다른 법률에서 공운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공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공단 이사장의 연임반대 통보는 공운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해 청와대나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월권인 셈이다.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공단 이사장의 비연임 결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 내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평가하면 될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사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공단이사장을 교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이 피땀 흘려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수익성 제고를 명분으로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몇몇 금융전문가들에 의해 ‘투기’로 내몰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금융시장 부양을 위해 동원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가입자인 국민을 위해 보험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이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문제를 방관하거나 찬성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그동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력히 주장해 온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초래한 것이며, 이를 위한 정치적 수순이자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의 노후와 복지 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청와대와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꼭두각시 노릇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추진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5. 10. 2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2015.10.22. 정부·여당 규탄 연금행동, 공무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100만 공무원이 지켜본다! 국민연금 급여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우리 공무원단체들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이라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지난 10월 7일 공무원단체들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청년단체들과 함께 늦게나마 출범한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에서 정부·여당의 책임성 있는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를 열흘도 채 남기지 않은상황에 국민연금 급여율 50%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소득대체율 분과는 여당의원이 지역일정 등을 핑계로 일정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 분과는 이제 겨우 세 차례의 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는 다름아닌 공무원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500만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연금을 삭감하는 희생을 전제로 출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497조는 바로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노후생존권을 담보로 만들어 진 것이기에 공무원단체들은 그간 일관되게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 급여율 50% 상향과 재정절감분 20%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은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쓰여 저야 할 재정절감분 20%는 나몰라라하고 기존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에 편성된 예산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과정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했던 공무원단체들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무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기구인 인사정책논의기구에는 법적지위를 문제삼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배제하더니 위원장선거를 방해하고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있으며 인사정책논의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단체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논의기구를 방치하고 있다.

급여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공적연금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에 따른 인사정책제도 개선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채 수년간 독보적인 수치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OECD노인빈곤율과 자살율,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세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단체들이 보였던 진정성을 부정하며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들의 삶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약속을 파기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개악되었으니 국민들의 노후생존권은 모르쇠로 방치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삭감은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면 그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들과 약속했던 대로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국민연금 급여율을 상향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이제 겨우 열흘남짓이다. 보험료 운운하지 말고 이제는 약화될 데로 약화된 국민연금 급여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계획을 즉각 수립하여 국민의 걱정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에 대한 논의를 이대로 지체하여 사회적기구를 무력화 하려 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의 지속적인이고 강력한 투쟁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밝힌다.

2015. 10. 22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 2015.11.4. 사회적기구 참여 위원 및 연금행동 기자회견

“사회적 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10월 30일 종료되었다. 국회는 5월 29일 법안 통과 이후 100여 일이 지난 9월 16일야 사회적 기구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4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시간이 부족했지만,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소모적인 논의가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91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반면, 사회적 기구는 고작 10차례의 회의 밖에 열지 못한 채 종료된 것은 그 반증이다.

## 사회적 기구의 목적과 내용은 분명했다

사회적 기구는 지난 5월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논의의 기구였다. 특히 2028년 40%까지 떨어질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상향하고, 공무원의 희생을 통한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자는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최초의 기구였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회의 무력화와 국회의 무능한 대응은 결국 민의를 저버리고 정치를 철저히 국민들로부터 배제시키는 합작품을 만들어 냈다. 사회적 기구의 무력화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국민과 공무원의 뜻과 노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정권의 의도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자 본연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9월 16일 개최된 1차 전체 회의부터 여당 의원들은 49.6%라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과장되었으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급기야 OECD 기준에 비추어 볼 때 40%라는 국민연금 급여율은 낮지 않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반복했다.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의 주장은 ‘후세대 갈취’, ‘보험료 폭탄’, ‘기금고갈’ 등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왔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간 행보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급여율 상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분과는 사회적 기구 종료 시한을 불과 5일 앞두고 첫 회의를 잡았을 만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엔 애초부터 불가능했으며 분과회의에 참여한 여당 측 위원들의 발언은 공적연금 강화의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 분과에 배석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이라는 개념은 없고 단지 정부 적자를 줄인 것에 불과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후반부 회의에는 예결위 회의를 핑계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사용자단체는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반복해 되풀이하면서, 700조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자본은 노동자의 노후를 위해 한 푼도 기여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했다.

**사회적 기구 활동은 끝났지만, 공적연금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일방적인 정부 주도로 일관했던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함께 논의하자고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기구는 이렇듯 정부·여당과 자본의 무력화 기획 속에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종료됐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형성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보장의 공감대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극명히 드러낸 과정이었다. 어떠한 합의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사회적 기구는 또 한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부와 자본에 의해 비웃음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결국 이번 사회적 기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부동의 세계 1위인 노후빈곤해소는커녕 향후 국민 연금을 통한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마저도 방치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과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어떠한 이해관계자도 포함되지 않고, 단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25일간 연장된 특위에서 얼마나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논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시민사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민행동은 이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람이 또 다시 국민들을 대표해서 논의하는 일이 없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또 다시 시간끌기와 소극적인 태도로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공적연금강화는 국민들 스스로 나서서 해결할 것이다.

2015년 11월 4일

사회적 기구 위원(권문일, 김연명, 문유진, 정용건, 정혜경, 최두환)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2015.11.24. 국민대타협 기구, 사회적 기구 부인하는 정부·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국민대타협 기구, 사회적 기구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참담하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난 10월 30일 활동이 종료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에 이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마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25일, 그 정해진 기한만 바라보고 있다.

사회적 기구와 특위는 지난 5월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논의의 기구였다. 특히 2028년 40%까지 떨어질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상향하고, 공무원의 희생을 통한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자는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최초의 기구였다.

사회적 기구를 무력화한 것도 국민의 엄중한 지탄을 받아야 할 과오이거늘, 국회 특위에서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그 어떤 논의와 합의도 만들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무시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비민주적 행위의 극단이다.

지난 20일에 열린 특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반영할 필요가 없고, 과거 제출된 법안 위주로 논의하자고 했다고 한다. 사회적 기구에서 최소한 합의된 내용, 즉 청년, 특수고용노동자 및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과 크레딧제도의 확대 방안 마련도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회적 기구에서 미진했던 논의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법안으로 구체화할 책임이 있는 특위가 오히려 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마치 모든 성과를 이룬 듯이 본말전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안을 핑계로 사회적 기구에 위원들이 불참하는 것은 다반사였으며, 공적연금 악화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고민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OECD 1위인 노인빈곤율이 과장됐다는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지 않다는니 궤변으로만 일관했다. 사회적기구와 특위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일관된 행태는 국민 노후에 대한 기만 그 자체다.

정부는 어떠한가? 국민의 권리로 요구하는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공연히 돈줄을 쥔 마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든 논의를 무시하였다. 예산절감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지난 5월 여야 합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이라는 개념은 없고 단지 정부 적자를 줄인 것에 불과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렵

다'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다. 무능력한 복지부는 국민 노후 복지를 주관 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민생인가?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민생이다. 부동의 세계 1위인 노후빈곤율을 낮추고, 이를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만큼 중요한 민생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보여준 사회적 기구와 특위에서의 기만적인 행태는 그들이 주장하는 민생이 사기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준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형성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보장의 공감대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극명히 드러낸 과정이었다.

우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공무원 단체들은 국민들의 노후 복지를 외면하고, 대타협기구와 사회적 기구를 전면 부인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결국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먹튀 행각이고, 사기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정부, 여당이 사회적 기구와 특위에서 보여준 국민 노후에 대한 기만적인 행태는 결국 국민들의 지탄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5.11.2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2015.11.25.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 종료 관련 성명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나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던,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목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기어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 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뺨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기업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  
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 11. 25.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 2015.12.9. 노동계약 중단 및 한상균 위원장 강제 체포영장 집행 중단 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라!”

경찰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305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교 본산을 침탈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짓밟겠다는 것과 다르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계약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명백하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핵심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재벌들 돈벌이 편의를 봐주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계약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대표를 구속하고 노동 계약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고자 한다면 재벌 편들기가 아닌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2015. 12. 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2015.12.14.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및 국민연금공단 낙하산 이사장 선임 반대 성명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가 마감된다. 알다시피 이번 신임 이사장 공모는 정상적인 임기교체에 따른 공모가 아니다. 지난 10월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모전부터 파다했다.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 500조 기금 및 5,000명 조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와 기금에 대한 신념과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이사장 선임이 아닌 한국사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현재 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자화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려야 하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소 국민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신념과 거리가 먼 인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인사는 결코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반드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아니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제도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서 비롯된 문제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낙하산 이사장 추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 12. 1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2015.12.21.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으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한 명을 제외하고, 오늘(21일) 문 전 장관을 포함해 두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 공모전부터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교감 없이 선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낙하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짓이다. 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연금일진대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앞장 서 불신을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은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 전 장관은 50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금운용 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은 폭주하고, 잘못된 기금운용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도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뿐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때

KDI 연구원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하고 연구원들과 같이 식사한 것으로 꾸며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관외지역에서 사용한 일도 수두룩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없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던 장본인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그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경질된 사람이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비극의 책임자이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철저히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의 노후마저 위협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연금 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부추기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여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바치려 하며, 도덕적 청렴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에 빠뜨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 12. 2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2015.12.28.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국민들의 반대에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이제는 복지부 장관의 제청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애초 공모전부터 문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실제 지원자수도 역대 최저인 3명에 그쳐 사전에 문 전 장관으로 교통정리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공모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언질 없이 지원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무능력하게 메르스 확산을 방치해 38명의 애꿎은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이다. 곧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복지부 내 관련자들이 줄줄이 중징계가 예고되고 있는데, 그 최종 책임자가 징계는커녕 이사장으로 금의환향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 지난 5월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했을 때, 문 전 장관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하는 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노동사회 단체들의 연이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다음 아고라 청원에서는 이틀 만에 2,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청와대 앞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가 온 국민이 반대하는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할 수 있는 책임자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관시절 문 전 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사람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

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제도와 기금을 균형 있게 이끌어가야 할 공단 이사장이 기금분리의 특명을 받고 제도를 망가뜨리려 내려오는 셈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KDI 재직 시절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일이 수두룩했다. 심지어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외식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법인카드나 이용하는 사람을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지는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 전 장관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제청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청와대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철회하여야 한다. 온갖 결격 사유로 점철된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짓이다. 그럼에도 문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방법을 다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 12. 2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2015.12.31. 문형표 이사장 임명 규탄 성명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히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 12. 3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으로, 공적연금으로  
2015년 연금행동 활동보고서

## 정책자료 | 91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4대 정책과제

### 1 안녕한 노후가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는 공적연금의 진보적 개혁방안 모색
- 사적연금 활성화 저지와 퇴직연금의 공공성 확보
-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대안적 프레임으로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시

### 2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 공적연금의 목표 보장성 신설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재강화 방안
- 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대상 및 크레딧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적극 해소
- 국민연금재정재계산 관련 각종 위원회에 가입자대표 참여 확대와 가입자의 알권리 보장

### 3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재편방안 모색

- 국민연금기금운용주체로서 가입자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및 기금운용본부 공단 내 유지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기반 투자 확대
-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기준 개정: 기금투자의 사회균형발전 영향 평가
-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 4 기초연금의 진짜 기초연금화

## 과제 1. 안녕한 노후가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 1.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는 공적연금의 진보적 개혁방안 모색

- 이제까지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가입자인 국민이 아닌 경제 및 금융분야의 특정전문가와 정부 관료에 의해서 주도되어 옴. 그 결과 소득보장의 안정성보다는 재정중심적인 개혁이 진행됨으로써 공적노후소득 수준을 위협해 옴. 이에 가입자인 국민이 중심적인 주체가 되어 제도의 대안을 만들고, 이러한 대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공적연금의 제도별로 분화되어 있는 가입자의 이해와 요구를 ‘공적노후소득보장 강화’로 모아내서 이제까지 일방적이었던 연금제도 개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함.
-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진보적 제도 개혁방안이 재정비되어야 함. 또한 세대내·세대 간의 연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임. 이에 기초연금/장애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축된 공적연금 전반의 제도적인 기능이 종합적으로 국민의 안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임.
- 이를 위해 정책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마련, 청년층과의 정책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대안모색에 힘쓸 것임. 또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 대중토론 및 교육과 공적연금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임.

### 2. 사적연금 활성화 저지와 퇴직연금의 공공성 확보

-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심화된 노인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2014년)’을 발표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논리로서 보장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그러나 실질임금 정체, 실업률 증가 및 고용 불안전의 심화 등으로 가계소득이 하락해 옴으로써 사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가계소득의 여력이 부족한 현실이 외면됨. 이런 관점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는 노후준비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전가하면서 국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됨. 이러한 국가 전략은 노후소득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노후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성이 큼.
- 이에 국민들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갖는 위험성을 폭로하고, 정책전반의 철회를 촉구할 것임. 더불어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모색이 중요하게 부각됨.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은 기금 투자의 결과를 가입자인 노동자가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자칫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을 위한 기금이 금융시장의 판돈으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재벌의 이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 이에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기금 관리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것임.

### 3.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대안적 프레임으로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시

-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취지는 '전 국민에 대한 노후보장'에 있지만, 실제 연금개혁의 방향은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갇혀 있음. 그 결과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것인 연금개혁의 핵심 목표가 되었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재정적자의 원인은 뒤로한 채 재정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강요해옴. 이로 인해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의 논리에서 활용했던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하락되었음. 정부는 스스로 벌인 계약의 결과로 위촉된 공적연금의 보장성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지우고 있음.
-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미 2009년 강력한 개혁을 통한 신규가입자들의 연금이 상당히 축소되었음에도 2014년부터 전체 공무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정절감을 목표로 정부의 강력한 계약이 시도 중임. 정부는 공무원연금 축소를 통해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을 분리시켜 갈등을 조장해 옴. 국가재정 부담만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은 국민과 공직사회의 분열만 조장할 뿐 공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비판에 적극 참여할 것임. 나아가 계약저지에 머물지 않고 공적연금 전반의 제도개혁 과제 등에 대해 국민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것임.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재정안정화'프레임으로 급여삭감, 보험료인상, 수급개시연령 지연 등과 같은 모수적인 개혁으로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보장되기 어려움. 이에 출산률 제고, 고용안정 및 고용률 제고, 임금인상 등과 같은 제반의 사회적 정책 및 노동정책과 관련된 대안적 프레임으로서 '공적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안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공적연금 안정화의 방향을 마련할 것임.

## 과제 2.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 1. 공적연금의 목표 보장성 신설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재강화 방안

-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너무나 급격하게 연금액을 인하하여(2009년 50%로 인하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인하) 심각한 한국 노인들의 대량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음. 또한 40%의 소득대체율도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평균 가입기간을 23년으로 잡으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0%를 조금 넘는 그야말로 '용돈수준'의 연금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소위 A값)에 가까운 200만원 계층이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약 52만원으로, 이는 201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60만원보다 적은 액수임. 이렇게 볼 때, 장기 가입유지가 필요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별성이 급여수준에서 무의미해짐. 그러므로 기초연금 급여수준과는 다른 차원의 국민연금 급여보장성이 요구됨.

- 낮은 공적연금수급액은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동기 및 가입유지를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발생시킴. 따라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최소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급여수준을 재조정되어야 함.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40%까지 하락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론되어야 함.
- 공적연금 전반을 통해 노후소득으로 보장될 수 있는 목표보장성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표 하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재고되어 공적노후소득보장을 통한 적정 소득대체율이 달성되어야 함.

## 2. 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대상 및 크레딧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적극 해소

- 국민연금은 가입유지가 급여수준을 인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임.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실업률,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이 증대되었고, 이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뿐만 아니라 가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음. 현재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에게 미래소득의 불안정성이 더 심화되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소득위험성을 안고 있는 대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대두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납부 예외자수는 지난 11년 동안 큰 변동이 없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자 중에서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함. 또한 여성이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5%에 불과해서(직장가입자 33.8%, 지역가입자 11.8%), 비정규직의 45%가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됨. 국민연금 미납 사유 조사에 의하면 약 87%가 실직, 사업 중단, 생활 곤란 등 소득부족이 주요 원인임.
-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함.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13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노동자에게만 적용함으로써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각지대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특히 지역가입자로 편재된 상당수의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료지원이 실시된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임. 또한 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필수적임.
- 여성의 가입유지 인정을 통한 급여수준 확대에 기여할 출산크레딧은 '양육크레딧'으로 정책적인 전환을 통해 여성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입기간 단절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함. 특히,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 적용대상을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은 12개월로 인정되어야 함. 이는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사안임.
- 또한 국민연금의 다양한 크레딧 제도에 대한 도입과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서구의 연금 보험료 납부 면제제도처럼 공익적 목적의 활동, 실업기간, 양육과 노인돌봄 기간 그리고 대학원 등의 학업기간에 대한 다양한 연금크레딧을 도입하고 제공함으로써 연금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운동을 벌여 나갈 것임.

### 3. 국민연금재정재계산 관련 각종 위원회에 가입자대표 참여 확대와 가입자의 알권리 보장

- 국민연금법에는 5년에 한번 씩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재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2003년, 2008년, 2013년에도 공식적인 재정재계산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음.
- 국민연금재정추계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재정전망을 추계하는 것임. 그러나 정부의 국민연금의 재정재계산 결과가 오로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의 본질적 목적이 등한시되고 그 결과 국민연금의 제도적인 축소가 진행됨. 2008년의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액을 60%에서 40%로 1/3이나 삭감하는 세계연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연금액 인하가 이루어짐.
- 이에 현재 정부가 구성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그리고 ‘기금투자위원회’ 3개 위원회에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참여의 수를 대폭 확대해서 가입자의 이해가 잘 대변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것임. 또한 정부위원회의 활동과 독립적으로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독자적인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본질과 재정불안정의 사회·경제적 의미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 제시할 것임.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걱정하는 정부 보고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재정재계산의 결과,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임.

## 과제 3.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재편방안 모색

### 1. 국민연금기금운용주체로서 가입자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및 기금운용본부 공단내 유지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방향 설정,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지만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지휘와 감시 역할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기금운용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 등이 갖는 폐쇄성을 내세워 가입자 대표위원들의 권한이 형식화됨. 가입자 대표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감독권한의 강화를 위한 위원에 대한 전문성 지원, 사전적인 내용 설명 및 공유와 같은 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임. 또한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및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의 ‘독립화’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음. 이 방안은 5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민간금융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한 독립된 기구개편을 의미함. 더욱이 기금운용 조직의 분리는 기금의 모태인 국민연금제도와와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이 전면 강화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입자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전문성 지원이 보장된다면,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보고받을 수 있고, 주요

안건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투자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고,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기금운용이 가능해 질 것임. 이렇게 가입자를 대변하고, 가입자 대표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제도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배구조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로 발전될 수 있음. 그리고 현재 과도하게 대표되어 있는 정부위원수(현재 기재부 등 5인)는 축소하고, 지역가입자 대표 선정 방식이 국회 추천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독립화 방안 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며, 기금운용의 재정적 수익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적 성격이나 안정성 및 지속성을 고려한 기금운용 방안이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모색되어야 함. 이에 필요한 정책적 분석과 방안을 마련할 것임.

## 2.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적책임투자 강화

- 국민연금기금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도 연기금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1%에 불과한 '사회책임투자펀드'는 공적연금기금인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를 명목적으로만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음. 또한 국제적 확립된 원칙인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반하여 법적·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기업, 그리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활동에 대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사회책임투자(SRI)를 한 개의 '사회책임투자펀드'의 역할로 왜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대원칙으로 설정하고 기금투자운용 전반에 이 원칙을 적용시키는 여론 조성과 입법 활동을 전개할 것임. 여기에는 기금운용 전반에 국가균형발전,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 및 적용시키고, 채권, 주식, 대체투자, 복지투자, 위탁투자 등 전 투자분야에 걸쳐 사회적 책임투자원칙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함.
- 또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방식을 병행하여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금융(채권, 주식) 투자 기본 지침 구축할 것임.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은 물론, 산업별로 자본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최소 투자 비중을 설정하여 운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될 것으로 기대됨. 이밖에도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수익성 중심주의 조항 개정 및 사회적 책임투자원칙 관련된 조항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 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기반 투자 확대

- 국민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는 과거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대부형태의 투자를 통해 시도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형해화되어 있고, 현재 복지사업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금융투자를 줄이고 획기적인 규모의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국민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면, 한국 복지국가의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보편주의적 성격을 제고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고,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할 것임. 또한 낭비적 복지비용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공공복지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복지예산의 적절한 규모 유지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보편적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가능함.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고용률,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여줌. 즉, 복지인프라 투자는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낮추어 줌으로써 출산율과 고용률을 높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을 높임.

-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통해 공공복지인프라의 비중을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투자로 공공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 및 입법 활동을 전개할 것임.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는 직접투자, BTL 방식, 시장유통이 되지 않은 특별채권발행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노력할 것임. 대원칙은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가져오는 투자방식을 지양하고,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수익률 보장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임.

#### 4.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기준 개정: 기금투자의 사회균형발전 영향 평가

- 국민연금은 그 규모면에서나 기금의 성격 면에서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연구원과 외부평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기금운용 성과평가는 대부분 정량적 기준에서의 수익률 중심의 펀드평가보고서와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 이에 국민연금 성과평가지 경제사회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관련법 개정운동을 통해 단기적 수익률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안정성과 사회적 효용의 증대로 설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사회, 경제적인 영향 및 사회균형발전 평가와 국민연금의 제도안정성을 평가의 핵심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할 것임.

#### 5.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5%가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닌 당연한 의무임.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당위성은 기금운용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음. 그러므로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수익률의 제고를 위한 주주권의 행사가 아닌, 국민연금의 사회적 성격에 기초한 주주권의 행사 방안을 마련하여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가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을 증대시키고, 미래세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 의결권 차원에 머무르던 주권의 행사를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운동을 벌여 나갈 것임. 또한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시적 감시체계와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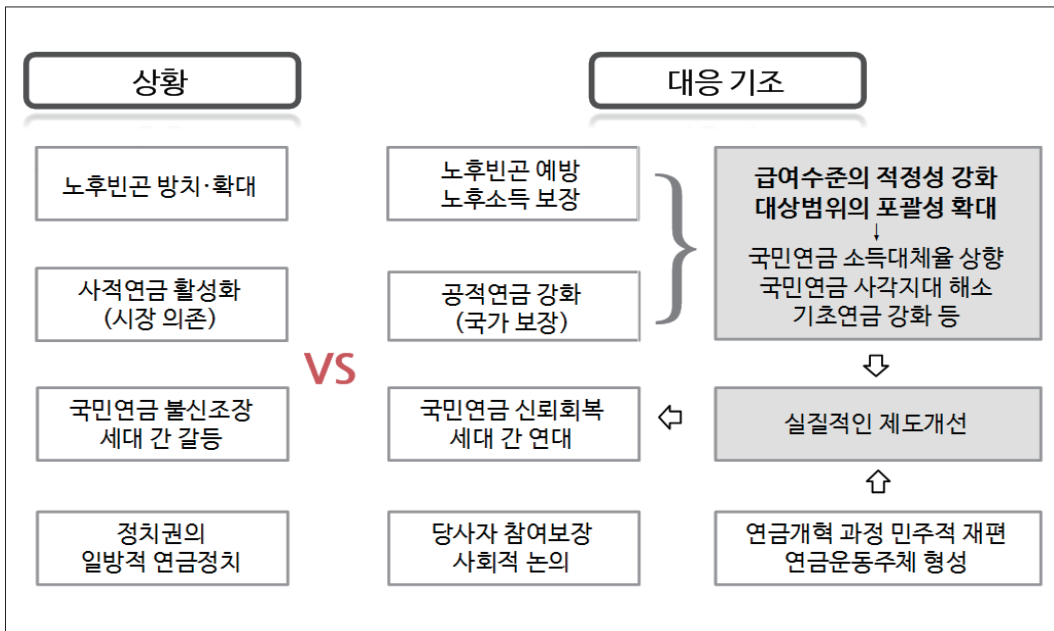
#### 과제 4. 기초연금의 진짜 기초연금화

- 2014년 기초연금법의 제정으로 일부 노인들의 급여수준이 인상되었으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근본적인 노인빈곤해결에 기존의 급여대상자 기준은 적절하지 않음. 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우 극소수의 노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소득이 없는 극심한 빈곤상태에 처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전체노인 중 70% 노인에게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로는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 더욱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유지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흔들고 있음.
- 가입자의 기여를 기반에 둔 국민연금, 조세를 기반에 두면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기초연금이 각각 제도의 목적에 맞도록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급여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해야 함. 또한 국민연금 급여수준과 연계한 기초연금 급여 삭감 조치를 폐지하고, 기초연금의 현재 가치 보장을 물가상승률 방식이 아닌 소득상승률(A값 인상률) 방식으로 개편해야 하며, 기초수급자는 줬다 뺐는 방식이 아닌 생계급여와 별도로 기초연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이것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임.
- 소득수준, 국민연금 급여수준과 연계된 급여삭감 등 기초연금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차등적 장치를 없애기 위한 정책적, 운동적 활동을 이어갈 것임. 나아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체계 내에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초연금의 절적인 보장수준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인, 청년, 노동자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긴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것임.

##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2015.9.14.)

### 자료 1.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대응방향과 정책과제

#### 1. 대응기조



#### 1) 노후빈곤 방지 → 노후빈곤 예방 및 노후소득 보장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OECD 평균의 4배).
  -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빈곤율의 지속적인 증가추세(2006년 46.3%, 7년간 3.3%p 지속상승).
  - 노인 소득불평등도 멕시코, 칠레에 이어 OECD 국가 중 3위(한국 0.42, OECD 평균 0.294).
  - 노인일수록 훨씬 더 높은 빈곤위험에 노출(전체인구 빈곤율의 약 3배)
- : 노후빈곤의 심화. 방지할 것인가, 해소할 것인가 → 노후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구체적인 대안제시 및 실질적인 제도화.

#### 2) 시장 의존(사적연금 활성화) → 국가 보장(공적연금 강화)

-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

- 그러나 노후소득보장 기능 취약. 빈곤해소는 고사하고, 노후소득 불평등까지 확산.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9.4%(25년 가입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 89.5%, 10인 미만 11.7%, 연금수령자는 4.8%에 불과.
    - (개인연금)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가입률. 10년경과 유지율 58.5%에 불과.
  - 유럽선진국은 노인가구 소득원의 7~80%이상이 공적연금. (한국은 근로소득이 63%)
- : 개인이 책임질 것인가, 사회적으로 책임질 것인가 →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치적 균열 및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한 정책기조의 전환.

### 3) 국민연금 불신 조장 → 국민연금 신뢰 회복

- 국민연금에 대한 감정적 불신과 불만 팽배(“국민연금 신뢰한다.” 26.7%\_2012 국민연금공단연구원,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든 것이다” 83%\_2013 KBS여론조사.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 10만 7천명 참여\_2013부터 납세자연맹) 대부분, 정치권과 보수언론의 악의적 왜곡과 선동에 기인.
  - ‘기금고갈론’, ‘후세대 갈취론’, ‘보험료 폭탄론’ 등 왜곡된 이데올로기는 공적연금 축소의 근거이자, 확대의 걸림돌. 나아가 국민연금의 제도적 신뢰기반마저 위협.
- : 국민연금 불신 조장, 세대 간 갈등 유발, 공포심 자극하는 정치적 공세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

### 4) 정치권의 일방적 연금정치 → 당사자 참여를 통한 소통과 합의의 연금정치

- 한국의 연금개혁은 정치공학 중심의 일방적인 개혁의 역사(2007년 국민연금 급여 1/3 삭감 및 기초노령연금 급여인상 미이행에 이어 2013년 기초연금 공약위반 등). 정치권 여야 합의,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없었음. 이러한 일방정치가 제도불신으로 확산.
  - 이번 사회적 기구는 의제(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의 내용적 측면, 노동·여성·청년·시민사회 등 당사자 참여가 보장된다는 구성적 측면에서 기존과 다른 사회적 논의 구조 마련.
- : 가입자의 사회적 발언력과 개입력 강화 및 연금개혁 과정과 구조를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정치적 계기 형성.

## 2. 대응목표 및 방향

### 1) 대응목표

- (1) 국민연금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쟁점화 및 실질적 제도화
- (2)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회복 계기마련
- (3)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공적연금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4)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한 정치적 균열 및 공적연금 왜곡논리의 허구성 폭로
- (5) 연금행동의 사회적 발언력 및 정책적 개입력 강화

## 2) 대응방향

(1)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그동안 한국사회의 연금운동은 '개악저지'에 초점을 맞춘 수세적 방어투쟁 중심. 이조차 낮은 사회적 관심과 지지, 연금운동주체의 취약성 등으로 많은 한계 존재. 이러한 개악은 또 다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며, 악순환 반복.
- '사회적 기구'를 공세적 대응을 통한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노후 빈곤의 심각성과 공적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쟁점화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함. 이는 제도개선 차원의 의미뿐 아니라, 국민연금 정책기조에 대한 전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임.

(2) 기금고갈, 후세대부담, 보험료폭탄 등 악의적 선동에 적극 대응한다.

- 새누리당은 애초 당·정·청차원의 핵심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기 때문에, 사회적 기구에 대한 의지 부재. 지금도 '시간 끌기'로 일관. 이미 경험했듯이, 오히려 기금고갈, 후세대갈취, 보험료폭탄 등 악의적인 선동으로 왜곡된 대중정서 형성.
- 이는 그동안 연금을 개악시켜온 논리이자, 국민연금 강화를 가로막는 근거. 정부와 새누리당의 논리에 대한 허구성을 제기하는 한편, 재원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

(3) 사회쟁점화와 정치적 압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대중사업을 추진한다.

- 사회적 기구 내에서의 대응만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움.
- 사회적 기구 및 특위 기간에 맞춰 쟁점화, 여론화 및 정치적 압박을 위한 집중적이고 다양한 대중실천계획이 병행되어야 함.
- 특히 사회적 기구 활동기간이 공적연금강화의 종결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실천들이 총·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3. 대응체계

1) 노동시민사회 대표위원 및 전문가 간 상시적 공조 및 지원체계 구축

- 노동시민사회 대표위원 간 상시적 소통 및 협의, 대응공유 및 역할분담 등
- 연금행동 내 주기적·상황별 경과보고 및 대응 방향 등 논의
- 전문가위원 및 연금행동 정책위원들을 통해 대표위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 등.

2) 야당과의 유기적 협의체계 구축

- 독자성 유지하되, 야당과의 유기적 협의관계 유지(집행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공식 채널단일화).
- 필요에 따라 사안별 내용적 공조 및 공동대응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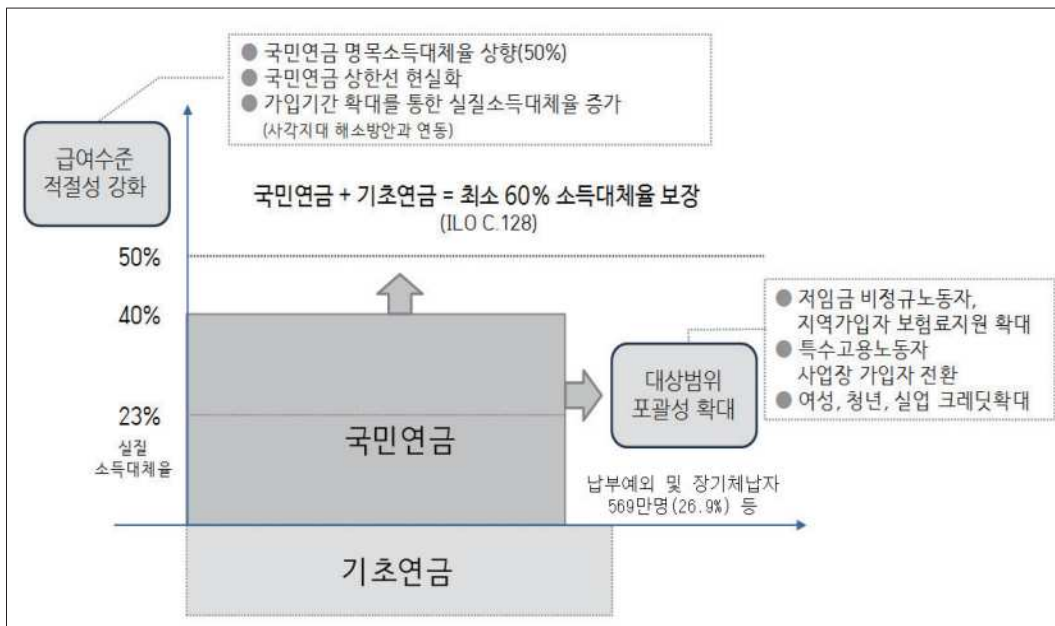
3) 사회적 기구를 통한 교섭과 대중운동을 통한 사회적 압박 병행추진

- 사회적 기구에 대한 교섭력 강화를 통해 요구쟁점화 및 실질적 제도화.
- 다양한 방식의 대중 활동을 통한 정치적 압박 및 사회적 지지 확대.
- 연금행동 전체적 차원의 공동사업과 각 단체별 사업의 유기적 결합.

4. 정책기조 및 요구

1) 정책기조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 급여수준 적절성 강화 + 대상범위의 포괄성 확대(사각지대 해소)



- 현행 국민연금은 낮은 급여율, 낮은 가입률로 인해 제대로 된 노후 소득보장기능 취약.
- 연금제도의 애초 취지와 목표에 맞게, 노후빈곤 예방 및 나아가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 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한편(명목 및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광범위한 사각지대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표] 국민연금 수급률 및 급여율 전망(단위 : 명, %)

구분	2013	2015	2020	2030	2040	2050
노인 수	6,138	6,624	8,084	12,691	16,501	17,622
노령연금 수급자 수	1,782	2,056	2,764	5,194	8,972	12,310
수급률	29.0	31.0	34.2	40.9	54.4	68.4
평균 소득대체율	<b>19.9</b>	<b>24.2</b>	<b>24.8</b>	<b>23.3</b>	<b>21.8</b>	<b>20.4</b>

\* 자료 :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2013). 평균소득대체율은 재정계산 결과(2013)에 따른 국민연금연구원 추계자료(2013.4).

(2)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 강화

-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 가능.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전제돼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보가능.

2) 정책요구(개요) : 3대 요구 10대 과제

요구	정책과제	정부예산
<b>소득대체율 상향</b>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상향	
	○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현실화	
	○ 기초연금 강화 및 제도개선	○
<b>사각지대 해소</b>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현행 '두루누리 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사업장 대상 기준 및 수준 상향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신설)	○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 출산 및 군복무, 실업 크레딧 확대 - 육아크레딧 도입(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가입기간 인정) - 청년대상 실업 및 직업훈련 크레딧 도입	○
	○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
	○ 당면가입 상한연령 상향	
<b>제도신뢰 강화</b>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 -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의 연금급여 전환 - 분할연금수급권을 개별수급권으로 전환 - 중복급여 조정 개선 - 유족연금 소멸사유 개선 - 연금급여의 최소지급기간 보장	
	○ 국민연금의 사회복지 투자 확대 - 모두가 행복한 공공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병원, 공공요양시설 확보 - 대학생 기숙사, 신혼가구 및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 다주택소유자 주택매입으로 청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시장개선에 대한 적극투자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방안 및 시기 등)은 향후 적정 적립금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 및 전망 하에 논의(현행 사각지대 문제 및 사회적 수용성 등 고려).

※ 사각지대 해소에 소요되는 재정은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일부 매칭).

자료 2.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3대 요구, 10대 과제

요구	정책과제	정부예산
I 소득대체율 상향	I-1.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상향	
	I-2.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현실화	
	I-3. 기초연금 강화 및 제도개선	○
II 사각지대 해소	II-1.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현행 '두루누리 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사업장 대상 기준 및 수준 상향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신설)	○
	II-2.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 출산 및 군복무, 실업 크레딧 확대 - 육아크레딧 도입(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가입기간 인정) - 청년대상 실업 및 직업훈련 크레딧 도입	○
	II-3.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
	II-4. 당연가입 상한연령 상향	
III 제도신뢰 강화	III-1.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III-2. 국민연금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 -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의 연금급여 전환 - 분할연금수급권을 개별수급권으로 전환 - 중복급여 조정 개선 - 유족연금 소멸사유 개선 - 연금급여의 최소지급기간 보장	
	III-3. 국민연금의 사회복지 투자 확대 - 모두가 행복한 공공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병원, 공공요양시설 확보 - 대학생 기숙사, 신혼가구 및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 다주택소유자 주택매입으로 청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시장개선에 대한 적극투자	

## I-1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상향

### [현황 및 필요성]

-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대신 2008년 전체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평균소득의 5%(현재 1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2028년까지 10%로 인상할 예정이었음.
- 박근혜정부에서 2028년에 예정된 10%를 2014년 7월부터 인상하여 지급하는 개혁안을 제출하여 현재 전체 노인의 약 68%에게 A값의 10%(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됨.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삭감하고, 소득(A값)상승률이 아닌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는 상당히 하락할 것이며 소득대체율은 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시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4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나 실제가입기간은 평균 24년으로 잡으면 소득대체율은 24%이며 실제연금액은 48만원 수준임. 이는 201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1만 7천원에 미달함.
-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년당 지급율이 1.25%로 0.25%p 늘어나 (50%/40년=1.25%) 24년 가입 시 실질소득대체율은 30%가 되고 연금액은 최저생계비 수준인 60만원에 접근함. 즉, 소득대체율 50%가 갖는 의미는 평균적인 국민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음.

구분	소득대체율 40%	소득대체율 50%
명목소득대체율 적용 (40년 가입시)	80만원	100만원
실질소득대체율 적용 (평균 가입기간 24년 적용)	48만원	60만원

\*비고: 생애평균소득 B값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A값(200만원)과 같은 평균소득자 기준(2015년)

### [요구안]

####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2015년 현재 46.5%)

-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방안 및 시기 등)은 향후 재정운영방식, 장기 재정목표 및 적정 적립금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 및 전망 하에 논의(현행 사각지대 문제 및 사회적 수용성 등 고려).

I-2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현실화

[현황 및 필요성]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95.7~'10.6월까지 22만원~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함. 2010.7월부터 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다시 조정하기 시작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기준 변동 현황>

구분	'88~'94년	'95~'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하한액	7만원	22만원	23만원	23만원	24만원	25만원	26만원	27만원
상한액	200만원	360만원	368만원	375만원	389만원	398만원	408만원	421만원

\* 2015년은 7월부터 적용, 상한액 참고 : 공무원 연금 805만원, 건강보험 7,810만원

- 2014년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 약 1,230만 명 중 약 226만명(18.4%)이 상한액 이상으로 실제 소득수준과 괴리
- 상한액의 제한은 A값(가입자평균소득)과 B값(생애평균소득)을 실제보다 낮추어 급여 수준을 약화.

<참고. 국민연금 급여산식>

국민연금 급여 산정식 =  $(1.5 \sim 1.2)(A + B)(1 + 0.05n/12)$

A :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현재 2,044,756 원)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한 가입월수

1.5~1.2: 비례상수. 평균소득자 기준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을 만들어주는 계수  
 [1.5는 소득대체율 50%, 1.2는 소득대체율 40%에 해당. 2008년 50%(2007년까지는 60%)에서 매년 0.5%씩 줄여 2028년 40%로 축소되는 과정에 있음(비례상수는 0.015씩 감소)]

[요구안]

➡ 소득상한선을 650만원으로 상향

※ 95년부터 A값 변동률에 연동했을 경우와 근로자평균임금(263만원)의 2.5배 수준 감안

### I-3 기초연금 강화 및 제도개선

#### [현황 및 필요성]

- 한국노인의 빈곤율은 2012년 기준 49.3%로 OECD 국가 중 1위(OECD 평균 12.8%). GDP 대비 공적지출은 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OECD 평균 7.1%)
- 2014년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수준과의 연계, 소득(A값)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줬다 뺐는 방식으로 사실상 반쪽자리 기초연금에 지나지 않음
-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노후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에서는 기초연금의 강화는 매우 중요. 사각지대 완전해소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보편적 기초연금이 실시되어야 함.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소득(A값)상승률과 연동해 실질가치 보장, 기초수급노인에게 차별 없이 지급, 그리고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점차적으로 A값의 15% 수준(30만원)으로 상향해야 함.
- 더불어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전액 국고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효율적이고 통일된 공적노후소득보장 상담 및 관리를 위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요구안]

- ➡ 급여수준 A값의 15% 수준(30만원)으로 상향 및 소득(A값)상승률과 연동해 실질가치 보장
- ➡ 급여대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 기초수급노인에게 차별 없이 지급 및 부부가구 감액 폐지
- ➡ 국민연금 급여수준과 연계한 기초연금 급여삭감 조치 폐지
- ➡ 재원 전액 국고 지원 및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리체계 일원화

### II-1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사각지대 문제임. 현재 국민연금에는 18세~59세 총 인구 중 전업주부 등을 제외하고 2,095만명이 가입 중. 이 중 실직, 사업 중단, 휴직, 재학 등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납부예외자가 약 457만 명, 1년 초과 장기체납자가 약 111만 명으로 약 568만 명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음. 즉 18~59세 총 인구의 약 절반이 공적연금 사각지대이고, 국민연금 적용대상 기준으로 약 27.1%가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 >

18~59세 총인구 32,994천명 (100.0%)					
경제활동인구 22,953천명					
공적연금 적용자 22,417천명					
비경제활동 인구 10,041천명	전업주부 등 공적연금 비적용자 536천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20,957천명			특수직역 연금 1,460천명
		납부예외자 4,571천명	소득신고자 16,386천명		
			장기체납자 1,118천명	보험료 납부자 15,268천명	
30.43%	1.62%	13.85%	3.39%	46.28%	4.43%
적용의 사각지대	적용 및 실질적 사각지대 혼재	<b>국민연금의 실질적 사각지대 5,689천명(17.2%)</b>		잠재적 수급권자 16,728천명 (50.70%)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 돌봄(아동 양육, 가사, 질병·장애 돌봄)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특히 가사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대상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음.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저항이 작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큼. 그러나 정작 필요한 이들 계층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음
-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14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고 두루누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필요. 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실시 및 점차적으로 영세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

[요구안]

➡ 두루누리 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지원대상 기준 개선: 사업장 10인 미만, 140만원 미만 → 30인 미만, 최소 최저임금 대비 130%로 상향(164만원)
- ※ 사업장 기준 상향시 재원 여력에 따라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만 우선 지원도 검토 필요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건강보험료도 포함
-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규인력 보강

### ㉠ 비공식 가사노동자 보험료 지원

### ㉡ 돌봄 노동자 보험료 지원

- 취학 전(7세 이하) 또는 중증장애 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고에서 보험료 전액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18세 ~ 60세 미만 신청자)에게 보험료 전액 지원

## II-2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국민연금 크레딧에는 출산, 군복무, 실업(도입예정) 크레딧이 있음
- 출산 크레딧은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3인 2상인 경우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최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인정소득은 A값 기준. 출산과 양육이 노후의 연금수급 권리를 방해하는 경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 수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 필요
- 군복무 크레딧은 군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 소득기준도 A값의 1/2에 지나지 않음. 군복무기간 실질적으로 취업 및 학업이 불가하고, 군복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타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군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소득기준 상향도 필요
- 곧 도입될 실업 크레딧은 인정기간 생애 12개월, 소득인정기준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에 한해서 지원 예정.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게 타당하고, 소득인정기준 역시 구직 급여 수준(A값의 1/2)에 맞추어 지원해야 함
- 또 현재 사용자로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산전후 휴가기간 및 무보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납부예외 처리되어, 출산·육아 기간 동안 가입기간 단절 발생되어 여성의 연금 수급권에 불리
- 현재 추세적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음. 구직 활동 기간에 대해서 청년대상 실업 및 직업훈련 크레딧 도입이 필요
- 한편 크레딧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할 경우, 미래 세대 부담 증가. 현 시점에서 정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적절.

[요구안]

➡ 가능한 크레딧 재원은 현 시점 정부 예산에서 총당

➡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 확대 및 개선

구분		현행	개선방향
출산	가입인정기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최대 50개월)	첫째부터 12개월 인정 및 산입기간 제한 폐지
	소득인정액	A값	좌동
군복무	가입인정기간	6개월	군복무기간 전체
	소득인정액	A값의 1/2	A값
실업	가입인정기간	최대 1년	산입기간 제한 폐지
	소득인정액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	A값의 1/2

➡ 육아크레딧 도입(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가입기간 인정)

➡ 청년 대상 실업 및 직업훈련 크레딧 도입

### II-3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약 130만~200만에 달하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택배, 쿼서비스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 못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내야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그들 상당수가 납부예외, 체납 등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음.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부분은 저임금 노동자로 그 누구보다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이 절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상법을 적용한 특례 등을 감안, 특수고용노동자를 사회보장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

[요구안]

➡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 II-4 당연가입 상한연령 상황

### [현황 및 필요성]

-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인구구조, 인구집단별 경제활동 수준이나 형태, 연금 수급개시연령 등이 다양하게 고려되어 설정되어야 하나, 제도 시행이후 변경 없이(18세~59세) 적용
- 2013년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1세로 조정되고 이후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중에 있어 가입 상한연령과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간 공백 기간 발생
- 특히 사업장가입자는 60세 도달시 가입자격 상실로 사업장에서 절반 부담 혜택 상실. 임의계속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 그 결과 60세 도달시 10년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납부 포기 및 반환일시금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기간이 충족한 자는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 상실
- 갈수록 취업 연령 늦어지고 현실적으로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당연가입 상한연령 상향 필요
- 대다수 국가는 수급연령과 가입상한연령을 연계하고, 수급연령보다 가입상한연령을 높게 설정하거나 반대로 낮게 설정한 국가는 일부

< 주요국가의 연금가입 상한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비교(2010년 기준) >

	독일	스웨덴	캐나다	일본	미국
제도	근로자연금	NDC 연금	CPP	기초연금	OASDI
가입상한연령	65세 미만	65세 미만	70세 미만	60세 미만	없음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65세	65세	65세	65세	66세

\* 출처 : 김성숙(2011), 국민연금 가입연령의 타당성 검토

### [요구안]

#### ☞ 당연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상향

- ※ 다만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 반발 등도 감안, 당연가입 상한 연령을 먼저 사업장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 필요. 예컨대 '수급개시 연령 전 사업장에 가입할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로 본다'로 예외규정 신설

### Ⅲ-1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국민연금 강화를 막고 있는 최대 걸림돌은 국민불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워낙 낮다보니 어떤 얘기를 해도 강력한 저항만 초래. 2004년에는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자는 대규모 안티 국민연금 사태도 발생함
- 이러한 국민불신의 배경에는 88년 제도 시행 후 10년 주기로 있었던 1998년, 2007년 급격한 제도개혁이 자리잡고 있음. 두 차례 제도개혁의 내용을 보면 모두 급격한 급여삭감에 초점. 98년 개혁당시 급여율을 70%→60% 인하, 수급연령 60세→65세로 상향했는데, 이는 수급연령 상향까지 감안하면 약 30%의 급여삭감 효과. 2007년도 역시 60%→40% 인하조치로 급여의 1/3이 삭감. 그 결과 현재는 애초 국가가 약속한 급여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제도의 효과가 채 나타나기 이전에 추진된 급격한 제도개혁은 당연히 국민불신으로 귀결
- 공적연금제도가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 한 세대(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40년)가 경과해야 함. 제도에 대한 신뢰를 만들기보다 재정안정에 치우친 일방적이고 성급한 개혁 추진의 결과, 현재 국민연금 불신의 핵심인 기금고갈론이 확산되고, 돈만 내고 나중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허황되고 과장된 논리의 기금고갈론 유포 중단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통한 개혁 과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급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의 명문화가 필요함

#### [요구안]

#### ☞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 Ⅲ-2 국민연금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

#### 가.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의 연금급여 전환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4급을 받은 가입자에게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장

### 애로 인한 소득 상실 보상

- \* 기본연금액의 40%가 67개월 가량 지급된 것으로 간주
- \* 1988년 ~ 2014.4월까지 장애연금 135천명, 장애일시금 63천명(46.7%)
- 장애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소득 활동자는 24.9%이며, 장애1급 7.0%, 장애2급 16.9%, 장애3급 32.8%, 장애4급 49.3%. 소득감소율은 장애1급을 100%로 환산할 때 장애2급 72.9%, 장애3급 55.8%, 장애4급 42.9%(최옥금, 2012).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율을 고려하면, 현재의 장애일시보상금 수급자는 장애연금 수급자보다 과소 보장
- 장애일시금을 운영하는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로 연금 선진국은 아님(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2012)
- 장애4급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종결하는 바, 경미한 장애라 할지라도 일시금 보다는 연금제도의 취지를 살려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

### [요구안]

#### ☞ 장애 4급 폐지 ⇒ 장애 3급으로 조정

- \* 현행 장애 4등급 체계를 3등급 체계로 조정하여 연금 형태로만 장애연금 운영(장애판정 완화 필요: 4급 ⇒ 3급→2급→1급)

### 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개별 수급권으로 전환

####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자가 이혼 후 수급연령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자(기여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분할연금 청구 가능
- 배우자였던 자가 사망, 장애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이혼 시기와 연금분할 시기 사이에 간격이 길수록 이혼 여성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위태로워짐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대해서만 분할을 허용하고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되기 이전에 혼인기간 동안의 소득이나 기여금에 대해서는 분할을 인정하지 않아, 자신 명의의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수급권을 증액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됨
- 전체 이혼건수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24.6%에 달하는 상황에서 5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엄격
- 해외사례에서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의 경우, 이혼한 즉시 연금을 분할하여 노령·장애·사망 등 제반의 사회적 위험에 독자적인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혼인기간 동

안의 배우자별 소득 또는 기여기록을 분할하여 각자의 계정에 기록하는 소득분할형태의 방식도 함께 채택하고 있음.

<연금의 분할 사유 및 시기>

구분	스위스	일본	독일	캐나다
분할 사유	이혼, 별거	이혼, 혼인의 해소, 사실혼의 해소	이혼, 사실혼 해소	이혼, 별거, 사실혼의 해소
분할 시기	분할사유 발생한 때	분할사유 발생한 때	분할사유 발생한 때	분할사유 발생한 때

\* 자료 : 보험연구원,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향」, 『KIRI Weekly』제 207호, 2012.

[요구안]

➡ 분할연금 수급권을 개별 수급권으로 전환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 혼인 기간을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도 동일하게 산입하고 이혼 시점에 연금가입 이력을 분할

다. 중복급여 조정 개선

[현황 및 필요성]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입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국민연금 가입 회피의 원인이 되고 있음. 물론 가입 중 사망일 경우 유족연금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향후 둘 다 노령연금 수급 시 발생하는 중복급여 조정에 대한 문제임
- 현재 국민연금은 두 개의 급여 발생시 많은 급여 하나를 택하는 게 원칙(중복 급여의 조정). 다만 미선택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20%(30%로 상향 예정) 또는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은 정지.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부부 둘이 가입했을 때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전혀 받지 않는다는 오해를 야기
- 동일한 연금급여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선택한 급여의 종류를 묻지 않고 동일하게 추가 지급 필요. 해외사례(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나 국내 타공적연금 사례의 경우 중복급여 조정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대신 급여 한계액(최저임금 등)을 설정하는 정도임

## [요구안]

- ☞ 우선 유족연금 선택시 노령연금도 동일하게 일부 추가 지급(30%)하되, 장기적으로 미선택 급여의 50%까지 상향 조정 및 중복급여 조정 폐지 필요

## 라. 유족연금 소멸사유 개선

## [현황 및 필요성]

- 유족연금은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취지가 있는바, “재혼, 입.파양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경우 또는 장애 2급에 해당되지 않을 때 수급권을 소멸시키고 있음
- 배우자 재혼의 경우 현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재혼율은 높은 상황이고 재혼하더라도 다시 이혼함으로써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하더라도 계속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자녀.손자녀의 입.파양의 경우 입양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19세 미만 자녀가 파양되는 경우 생계곤란 상태에 놓일 수 있고, 입양된 자녀로서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던 자녀가 가입자(였던 자) 사망 후에 파양되는 경우 본래의 친권자 등에 의한 생계보호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 미완치 상병의 경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장애2급 이상의 장애가 일시적으로 호전(장애등급 3급 이하)된 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요구안]

- ☞ ‘재혼’의 경우 수급권 소멸사유에서 삭제 또는 지급정지 후 이혼 시 재지급
- ☞ ‘입양 및 파양’의 경우 수급권 소멸사유에서 삭제
- ☞ ‘장애 2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는 지급정지 사유로 변경

## 마. 연금 급여의 최소지급기간 보장

## [현황 및 필요성]

- 국민연금은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 소멸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이어서 지급함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여 납부된 보험료 대비 지급받은 연금액이 매우 적고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법 제73조의 유족이 없는 경우, 기여에 대한 혜택이 너무 적어 유족의 제도 불신으로 이어짐. 의무 가입인데 일찍 죽으면 아무런 혜택도 없을 수 있다는 불신이 국민연금 가입 회피의 중요 이유 중의 하나임
  - 유족연금 지급총액이 사망일시금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일시금으로 보상(유족연금차액일시보상금\*)하는 유족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9세 도달을 사유로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국민연금법 제81조)
- 연금제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연금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구제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타공적연금의 사례\*처럼 보험료 기여분 대비 최소한의 기간은 연금 지급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 공무원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제56조 및 제57조)  
군인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제29조의 2 및 제30조의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제38조)

[요구안]

- ➔ 노령연금차액일시보상금 도입: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3년 이내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받은 연금액과 사망일시금과의 차액(또는 3년 도달 월까지의 잔여월수 해당 연금액)을 유족(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

### Ⅲ-3 국민연금의 사회복지투자 확대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대부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금융시장에만 투자가 되고 있음. 그러나 고수익 추구가 국민연금 재정에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금융위기도 드러나듯 더 큰 위험을 동반.
- 국민연금 재정은 인구구조, 경제성장, 노동시장참가율 등 사회 제반 여건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즉 생산가능 인구가 많아지고 그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재정이 안정될 수 있음.

- 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해 공공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공공기숙사, 공고노인요양시설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함. 공공병원, 공공요양시설이 늘어나면 가족부담을 줄이고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비용도 줄일 수 있음. 국민연금기금이 공공 보육시설에 투자되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노동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음. 또 국민연금기금이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에 투자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삶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요구안]

- ➡ 모두가 행복한 공공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병원, 공공노인요양시설 확보
- ➡ 대학생 기숙사, 신혼가구,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지원
- ➡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 ➡ 다주택소유자 주택매입으로 청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적극 투자

자료 3. 국민연금 수익비와 기금고갈에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국민연금 수익비와 기금고갈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5년 9월 14일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부교수

**김우창**

[wkim@kaist.ac.kr](mailto:wkim@kaist.ac.kr)  
<http://felab.kaist.ac.kr>

국민연금 수익비와 기금고갈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수익비에 대한 인식

- 수익비: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현재가로 계산된) 연금급여액
- “모든 가입자의 수익비는 1보다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은 당연하다.”
  - 국민연금과 관련된 논의의 시작점
  - 기금고갈은 “필연적”임을 의미함
- Q) Is it true?

2015년 9월 14일

카이스트 김우창

2

국민연금 수익비와 기금고갈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3년 추계기준 "평균적"인 2015년생 데이터

시간		5년 단위 납입보험료				5년 단위 수급연금액				
시작 시점 나이	시작 시점 연도	가입률 x 생존확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보험료	1인 평균 보험료	물가상승률 을 감안한 2015년 기준 현재가	수급률 x 생존확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수급 연금액	1인 평균 연금액	물가상승률 을 감안한 2015년 기준 현재가	
0	2015									
5	2020									
10	2025									
15	2030									
20	2035	0.47511	6,657,935	3,163,226	1,751,401					
25	2040	0.72847	8,416,751	6,131,344	2,928,364					
30	2045	0.74538	10,545,676	7,860,525	3,238,432					
35	2050	0.77202	13,132,761	10,138,777	3,603,153					
40	2055	0.80348	15,925,007	12,795,460	3,922,536					
45	2060	0.80994	19,404,332	15,716,289	4,155,994					
50	2065	0.78804	23,611,068	18,606,412	4,244,254					
55	2070	0.76149	28,654,957	21,820,581	4,293,574					
60	2075									
65	2080					0.94072	86,775,509	81,631,579	11,951,945	
70	2085					0.92947	98,529,231	91,580,076	11,566,322	
75	2090					0.89841	111,874,993	100,509,412	10,950,019	
80	2095					0.83088	127,028,435	105,545,304	9,918,841	
85	2100					0.69418	144,234,407	100,124,486	8,116,638	
90	2105					0.47042	163,770,924	77,040,675	5,387,284	
95	2110					0.21769	185,953,658	40,480,746	2,441,812	
					총액					
					28,137,708					
									총액	60,332,861
									<b>수익비</b>	<b>2.14</b>

2015년 9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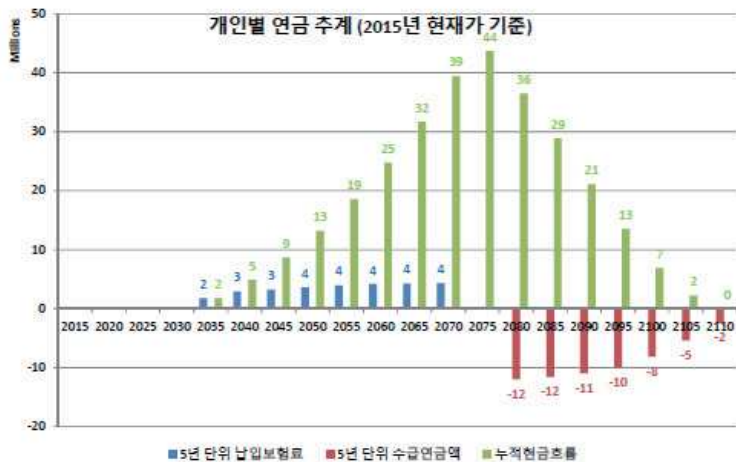
카이스트 김우창

3

국민연금 수익비와 기금고갈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수익비와 투자 (1)

- 국민연금 2013년 추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2015년 생" 데이터
  - 물가상승률: 3%
  - 투자수익률: 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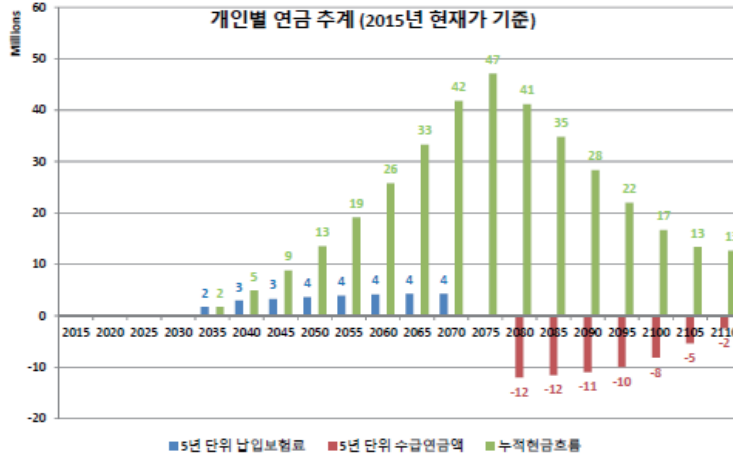
2015년 9월 14일

카이스트 김우창

4

## 수익비와 투자 (2)

- 국민연금 2013년 추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2015년 생” 데이터
  - 물가상승률: 3%
  - 투자수익률: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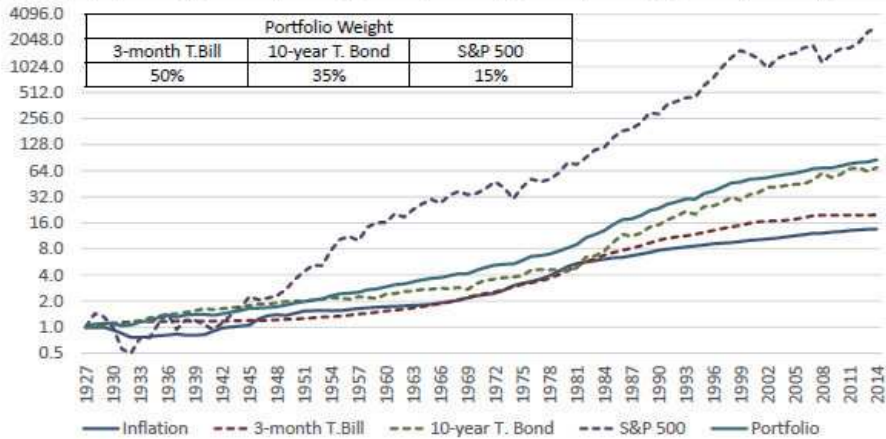
## 수익비와 기금고갈의 관계

- “모든 가입자의 수익비는 1보다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은 당연하다.”
- **No, it is not.**
- 개개인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 2% 초반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국민연금에게 남는 장사
- Q) 인플레이션 + 2.XX%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 수익비와 기금고갈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Model Portfolio for NPS

Performance					
	Inflation	3M T.Bill	10Y T. Bond	S&P 500	Portfolio
수익률	3.0%	3.5%	5.0%	9.6%	5.2%
변동성	4.1%	3.1%	7.8%	19.9%	4.5%
손실연도	7	0	16	24	4
최대손실	-10.3%	0.0%	-11.1%	-43.8%	-6.3%
30년수익	2.5	2.8	4.3	15.6	4.6



2015년 9월 14일

카이스트 김우창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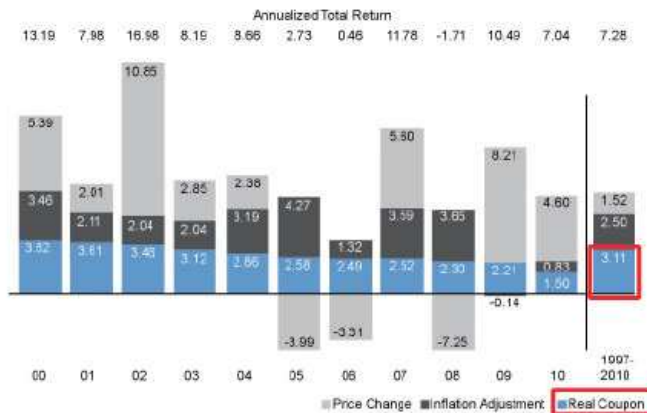
국민연금 수익비와 기금고갈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TIPS

#### COMPOSITION OF U.S. TIPS RETURN (%)

Based on monthly returns through 9/30/10

Source: Barclays Capital



[http://www1.tiaa-cref.org/public/about/news/comm\\_009.html](http://www1.tiaa-cref.org/public/about/news/comm_009.html)

2015년 9월 14일

카이스트 김우창

8

### Hypothetical Situation: 국민연금 2.0

- 2015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 국민연금제도 유지
- 2016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2.0”에 가입
- 국민연금 2.0은 출산율에 관계없이 기금 고갈이 발생하지 않음

### 기금 고갈은 필연적인가?

- 기금 고갈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것도 아님
  - 이는 제도 초기에 발생한 “부채” 때문임
- 즉, 향후 2060년 경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금 고갈은 “**단발성**” 기금 고갈이며
- 따라서, 이번 기금 고갈만 잘 막으면 기금 고갈을 일어나지 않을 것임
  - 인구투자가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현재까지의 국민연금제도를 다음 세대와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음
- 이제까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공리(公理)로 사용된 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로부터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언론기고\_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기고 <프레스안 2015.10.27.>

## 국민연금기금, 누가 운용할 건가

구창우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실장)

최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연임 반대 통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광 이사장의 월권과 책임론을 언급하며 자진사퇴를 종용하고 있고, 언론은 이번 국민연금공단 내 인사 갈등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0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다음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문제가 지난 10년 넘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으로 다시 번지고 있는 것이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둘러싼 쟁점

국민연금기금은 2014년 11월 기준으로 469조원에 달한다. 이후 계속 성장해 2043년에 2,561조(2010년 불변가격으로 1,084조)로 최고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GDP의 32.8%를 차지하고, 2035년에는 49.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실행 조직으로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거대하게 성장하고,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금운용체계, 즉 비전문가인 가입자 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조직 안에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대한 방향은 크게 수익률 vs. 안정성·공공성, 전문성 vs. 대표성, 독립성 vs. 책임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기금운용은 제도와 별도로 자산운용의 문제이기에 수익률을 최대한 제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상설화하고,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특히 경제부처), 금융자본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제도와 기금은 분리될 수 없으며,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단체가 기금운용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이

주장은 기금의 공공적 투자 강화로 이어지는데,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낮다?

현재 정부·여당이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주요 명분으로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든다. 세계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2009년 이후 계속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기금은 장기적 투자라는 기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단순히 특정기간만을 가지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기간을 본다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특정기간 수익률만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이 낮은 게 아니라 다른 연기금에 비해 변동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사실이다.

<표 1>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익률 평균
국민 연금	한국 NPS	-0.1	12.0	8.1	7.9	8.6	5.4	5.9	7.0	-0.2	10.8	10.6	2.3	7.1	4.2	5.3	6.3
	일본 GPIF	-5.7	-2.5	-8.5	8.4	3.4	9.9	3.7	-4.6	-7.6	7.9	-0.3	2.3	10.2	8.6	12.3	2.3
	캐나다 CPPIB	-9.4	3.4	-21.1	31.7	10.7	17.4	12.9	-0.3	-18.6	14.9	11.9	6.6	10.1	16.5	18.7	6.1
	스웨덴 AP3	-	-4.4	-12.4	16.4	11.4	17.9	9.7	5.1	-19.7	16.4	9.1	-2.4	10.7	14.2	13.7	5.1
공무원 연금	미국 CalPERS	-7.2	-6.1	3.7	16.6	12.3	11.8	19.1	-5.1	-24.0	13.3	21.7	0.1	13.2	18.4	2.4	5.2
	네덜란드 ABP	3.2	-0.1	-7.2	11.0	11.2	12.8	9.5	3.8	-20.2	20.2	13.5	3.3	13.7	6.2	14.5	5.9
국부 펀드	노르웨이 GPF	2.5	-2.5	-4.7	12.6	8.9	11.1	7.9	4.3	-23.3	25.6	9.6	-2.5	13.4	15.9	7.6	5.2

주 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설립(1999년 11월) 이후 실제 성과가 산출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연기금별로 성과를 비교함  
 2. NPS, AP, ABP, GPF는 12월 결산, GPIF, CPPIB는 3월 결산, CalPERS는 6월 결산임  
 3. 결산 월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비교를 위해 동년으로 준용함  
 4. 반올림에 의한 단수차이 있음  
 5. CalPERS 2014년 수익률은 예비보고 된 것임  
 자료 : 각 연기금 연차보고서 및 홈페이지 참고(ABP 수익률의 경우 2005~2014년 연차 보고서, 2000년~2004년 홈페이지 참고)

기금운용 수익률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정부가 수익률을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 2.5%p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향후 40년에 걸쳐 1% 초과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5.7%에 불과하다(김우창,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2015.7.9.)

오히려 고위험 추구로 인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1%p 초과수익 추구

시 변동성은 약 3배(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배(0.05%→10.42%) 이상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2008).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올해 국민연금기금이 500조를 돌파했는데, 만일 국민연금기금이 외국 연기금처럼 운용했다면 100조가 한 번에 날라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 전문가로 구성해야 수익률이 높아진다?

정부·여당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의 전문성이 결여돼 수익률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들을 대체해 금융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현재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운용위원 모두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투자공사(KIC)의 사례를 보면 투자가 개시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수익률이 4.02%로, 국민연금 6.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은 -13.71%에 달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전문성이 높다는 세계 주요 연기금도 금융위기 당시 -20% 안팎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금융위기나, 세계경제불황에는 전문가라도 속수무책이며,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노후불안과 제도불신으로 바로 직결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따라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독립성 보장?

한편 정부·여당이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주요한 명분으로 삼는 것 중의 하나가 기금운용의 독립성이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에서 독립시키고, 전문가로 구성하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독립성이라는 명분 이면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 참여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자본에 종속시키고, 경제부처가 국민연금기금에 우회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는 법적·형식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한국투자공사가 현실적으로는 금융이해관계자 집단과 경제부처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 금융전문가가 지배하는 기금운용공사가 역시 어떻게 운영될지 가늠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고위험 자산투자의 비중을 제어하고,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한 것은 가입자 대표의 역할이었다. 현행 가입자대표와 복지부 주관의 기금운용체계는 일부 개선의

필요성은 있어도 적어도 기금운용에서 경제부처와 금융자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정부·여당은 막연히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앞서 먼저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위험한도와 적절한 목표수익률이 나와야 한다. 수익률이야 무조건 높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험이 동반되고, 애초 보험료 대비 급여가 높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적립방식에서는 기금 수익률로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국민연금 재정운영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금소진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할지,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지, 반복적인 제도 조정(보험료와 급여)을 통해 기금소진을 연장할지, 또 특정 시점에 어느 정도 기금적립금을 유지할 지, 이런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필요하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다시 제도가 감당해야 할 부분(보험료율과 급여율), 정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출산율, 경제활동참가율, 소득상승률 등), 기금운용이 담당해야 할 부분(수익률)에 대한 책임을 적절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절한 기금운용 목표수익률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맞는 기금운용체계를 논의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안정성이 주요 원칙이어야**

정부·여당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리는 수익률을 앞세우고, 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설립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및 대체 투자 등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래 표를 보면, 현재 국민연금의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약 40%이고, 이에 비해 세계 주요 연기금에서 위험자산 비중은 60~80%에 이른다.

<표 2> 해외 연기금 자산배분 현황('13.12월말 기준)

구분	연기금	기금규모(조원)	자산배분
국가 연금	GPIF(일본)	1,291	주식 32%, 채권 66%
	국민연금(한국)	427	주식 30%, 채권 60%, 대체 9%
	CPPIB(캐나다)	199	주식 49%, 채권 34%, 대체 17%
	AP3(스웨덴)	42	주식 49.5%, 채권 25.2%, 대체 9.8%, 기타 15.5%
지역 연금	CalPERS(미)	299	주식 54%, 채권 22%, 대체 24%
	ABP(네)	437	주식 35%, 채권 39%, 대체 25%
국 편 드	GPF(노르웨이)	874	주식 62%, 채권 37%, 대체 1%

그러나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 위험자산 비중을 세계 주요 연기금 수준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맞는지는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 연기금의 경우 소득비례의 직역연금을 가지고 있으며, 자산 시장의 발달과 그에 맞는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반면 국민연금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연기금(OASDI)은 국채에 전액을 투자하고 있고, 일본 연기금(GPIF)은 안정 자산이 채권에 약 66%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고, 국내 자산시장이 취약한 국민연금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현행 기금운용체계에서 가입자 위원의 실질적 대표성 및 의사개입 결정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현재 기금운용위원 20인 중 5명이 기재부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자 단체 대표가 12인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 대표로 농협, 수협 등 금융기관이 참여해 대표성이 부족하다. 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는 기본적으로 분기별 회의체(연 4회 이상)로 되어 있고, 1회당 소요시간은 평균 2~3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내실 있는 기금운용 심의가 어렵고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이나 감독도 불가능하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당성이 없는 정부위원의 축소, 대표성을 결여한 일부 가입자대표의 조정, 가입자대표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해 가입자 대표의 책임성 역시 높여 가야 한다.

한편 가입자 단체 대표의 기금운용에 대한 개입력이 발전되는 과정에 맞추어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비상설 시스템에서는 기금운용정책에 대한 주도권 행사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통합 관리해야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기금을 모으고(가입·징수), 운용하고(기금운용), 지급하는(연금급여) 유기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금은 가입자에게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조성되는 것이며 기금운용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일부분이다. 국민연금기금을 단순히 여유자산으로 이해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을 제도에서 분리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연금기금의 특성 및 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하는 것은 결국 고수익 추구에 따른 고위험을 야기하고, 기금운용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기금고갈론'을 확산시켜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본질 훼손 및 불신을 강화할 것이다.

###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국민의 노후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수익률을 전면에 내세워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가입자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독립성이라는 명분으로 제도로부터 기금운용을 분리(공사설립)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이 과연 국민 노후와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것일까?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바로 가입자인, 국민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때다.

언론기고\_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 비판 관련 기고 <프레스안 2015.12.27.>

## 국민연금 운용 주식회사?… 문형표 재기용 노림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우려… 국민연금, 금융시장 부양에 동원하나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관피아 척결을 위해 낙하산 인사를 원천봉쇄하겠다던 박근혜 정부. 그러나 이런 장담과는 달리,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문제다. 입소문으로 내정설이 오르내릴 때도 '설마' 했다.

문형표, 그가 누구인가.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세계보건기구(WHO)의 메르스 감염 경고에도 방역 대책 준비는 고사하고, 감염자 발생 이후에도 안이하고 잘못된 지시로 초동 대응을 망친 책임자 아닌가. 메르스 국정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조차 거부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다.

조만간 감사원이 메르스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대규모 징계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문형표 전 장관은 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아무리 무개념이라도 청와대와의 교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 청와대의 믿음직한 청부 해결사

청와대 입장에선 문형표 전 장관이 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가장 적임자일 수 있다. 얼마 전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이나 기획재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코드가 일치한다.

이미 경험적 검증도 마쳤다. 복기해 보면, 문형표 씨의 보건복지부 장관 선임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진영 전 장관이 청와대 입장에 반대하다가 물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 기초연금은 노인 표심을 공략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다. 그리고 당선 직후엔 '줄줄이 공약 파기'를 예고하는 정치적 상징으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라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 연금공단 이사장 문제 역시 비슷하다. 최광 전 이사장 역시 따지고 보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다 쫓겨난 셈이다. 아무리 측근이라도 조금의 소신이나 항명도

용납하지 않는 게 청와대의 인사 스타일이다. 그런 점에서 문형표 전 장관이야말로 청와대의 지침대로 움직여줄 '검증된 해결사'다.

###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전략 인사

아무리 요새 청와대 인사가 거칠 것 없다지만, 38명의 국민이 사망한 메르스 사태로 경질됐던 문형표 전 장관을 몇 달 만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는 무리수를 둘까. 흔히 '보은'의 성격을 지니는 다른 낙하산과는 달리,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이는 단순한 조직 체계 개편의 의미를 넘어선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는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금융 시장을 부양하는 데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형식적인 가입자 대표의 참여마저 배제하고, 국민연금 제도로부터 분리해 경제 부처의 개입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이미 기재부는 '국민연금 운영의 금융 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과 부동산 분야에 투자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기금 운용 평가 지침도 바꿀 계획이다. 대체 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도 확대한다. 수익률을 높이면 그만큼 위험률도 높아진다.

1%포인트 초과 수익 추구 시 변동성은 약 3배, 손실 확률은 약 200배 이상 위험이 증가한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소중한 노후 자금 아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상에 근거한,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문형표 씨는 복건보지부 장관 재임 시기, 이러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했던 인사다. 이것만 중요할 뿐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530건에 달하는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같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 의심 문제에는 관심도 없다.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연금공단 이사장 자격 없다.

국민연금 공단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기 이전에, '보험자'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성실히 책임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자, 우선적인 역할이다. 다른 건 제쳐놓고라도, 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 씨는 정말 부적합하다.

복지부 장관 재임 당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상향'이 쟁점일 때도 "1700조 세금 폭탄" 발언으로 국민연금 불신을 부추기는 한편, 국민연금 부과 방식이 갖는 세대 간 연대의 특징을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했다. 기초연금 논란 때도, 현세대 노인층과 중·장년 및 청년 세대와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을 강조하면서, 1억이 넘는 사적연금을 부으며 몸소 실천까지 하고 있는 문형표 전 장관은 아무래도 낙하 지점을 잘못 잡은 거 같다. 최종 임명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 조만간 내정 여부가 결론이 날 듯하다.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에서는 문형표 전 장관의 공단 이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서명이 늘어가고 있다.



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으로, 공적연금으로  
2015년 연금행동 활동보고서

# 선전자료 | 135



○ 3.1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포스터



○ 4.25 대회 포스터

국민의 노후는 공적연금으로! 국가책임으로!

# 연금아, 노후를 부탁해!



##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

2015년 4월 25일(토) 서울대회 15시 서울시청 광장

부산대회 14시 송상헌 광장

광주대회 14시 구도청 민주광장

대구대회 14시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 공동투쟁본부



○ 4.25 대 회 전 단 지 뒷 면

**공적연금 개악=사적연금 활성화  
=노후 빈곤과 불평등 심화!**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이어서 공무원·사학연금까지 개악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줄이고,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노후보다 금융자본의 이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이 낮으니까  
사적연금이 가입하세요"**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

2007 국민연금개악

2014 기초연금 개악

2015 공무원연금 개악?

개인연금 연13% 성장률 보이며 급성장. 적립금 약 264조

퇴직연금 5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 적립금 약 107조



**너무 낮은 국민연금! 짝퉁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이미 2007년 개악으로 급여가 1/3까지 삭감됐습니다.(2008년 이전 60% → 2028년 40%로 삭감) 월 소득 200만원 가입자가 18만원 보험료를 20년 납부해도 연금액은 고작 42만 4,320원! 2015년 1인 최저생계비 617,281원에도 턱 없이 못 미칩니다. 이조차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소득하위 70%에게만 줄 뿐 아니라 그마저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은 최대 1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더군다나 물가연동 방식이 변경되어 2036년 실질급여율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후 갈수록 낮아집니다.



**국민연금기금도 분리해서 맘대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도 따로 분리해서 금융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합니다.

관피아를 위한 자리잔치, 금융자본의 돈 잔치를 위한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제도과 기금은 분리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진 국민연금기금,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4.25 대회 리플렛 전면



키워드로 알아보는  
공적연금 개악

# 우리의 노후를 지켜준다

국민의 노후는 공적연금으로!  
공적연금 개혁 반대

## 왜? 낮은 공적연금!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률 1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은 공적연금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나라	노인빈곤율 (%)	공적연금 비율 (%)
한국	49.3%	1.7%
미국	~15%	~15%
일본	~10%	~15%
OECD	~10%	~15%
이탈리아	~10%	~15%
영국	~10%	~15%
핀란드	~10%	~15%
덴마크	~10%	~15%
노르웨이	~10%	~15%
스웨덴	~10%	~15%
프랑스	~10%	~15%

## 노후 준비? 늙는 게 두려워요!

"국민 70%, 다른 노후준비 전혀 못하고 있다"  
"국민 70.6% 노후,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위험한 복지  
불안한 고용  
정년실업  
저임금  
실질소득 감소  
저생산  
아이양육  
부양부담

### 공적연금, 너만 믿었는데...

낮은 국민연금 (2028년 40%까지 축소)  
월소득 200만원 노동자, 18만원 보험료율 (18세가 1.2%부터)  
20년 납부해도 연금액만 고작 424,320원  
이조차 비정규 직업을 노동자에게만 그릴까?

기초연금 공약취반  
20만원 공제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상설가업자는 기초연금 감액, 공무원과 교원은 계층 대상에서 배제

이제는 공무원 사학연금 개혁까지

## "공적연금이 낮으니 사적연금에 가입하세요"

공적연금을 줄일테니까, 자신의 노후는 알아서 해결하란 말씀?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
2007 국민연금 개악 ↓ 2014 기초연금 개악 ↓ 2015 공무원연금 개악?	개인연금 한 13% 성장을 보이며 급성장 계입금 약 26조.
	퇴직연금 5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 계입금 약 107조.

개인연금? 소득하위 60% 미만은 연금보험의 가입률 95.9%, 나머지 높은 중도 해지률  
퇴직연금? 평균 급여를 약 14%에 불과하며, 전체 사업장 중 13.4% 도입,  
500만 이상 사업장은 86.5%, 30만 미만 사업장은 12.1%에 불과하며 가입

노후 빈곤 + 노후소득 불평등 심화

○ 4.25 대회 리플렛 후면

### 누가 진짜 세금 도둑?

**정부, 공무원연금기금 부당사용!**

- 전액 정부가 내야 할 부담금에 공무원연금기금 갖다 쓰기 9조 582억원
- 군복무 기간 소급부담금 미납 5조 3,814억
- IMF 대량퇴직 급여지출 9조 3,139억
- 필도공사회 비탈 3,261억
- 정부예탁자금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2조 7,897억
- 정부채권보유금 미 책입 7조 2천억

**공무원·교원, 2009년 연금개혁으로 47% 재정결감 고통 감내!**

###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

정부인 대로 하면 미래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절반으로 확입니다

월 140만원

1996년 임용자

월 76만원

2016년 임용자

9급 임용자의 공무원 연금 절반인

**재누리던 7년 간 100조원 재벌잡세**

### 정부의 재정책임 외면!

공무원연금에 국가가 투입하는 재정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공무원연금 지출

1.5%

2013년

한국

0.5%

2013년

공무원연금 정부 총 부담률  
(부담금+부진금 GDP)

1.0%

2040년

2060년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305개 노동·농민·빈민·청년·노년·여성·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 노후의 존엄과 권리,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해 모였습니다.

**목적**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의 기본소득 보장 /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 / 사재금 활성화 반대 및 규제강화, 제도 개선 / 공적연금의 친보좌 지원방안 모색

계연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02-2631-1948 FAX 02-2631-1949  
 주소 150-03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1-17번지 2층(강남사무실)  
 110-043 서울 종로구 지하문로5길16 참여연대 4층(강북사무실)  
<http://blog.naver.com/pension1023>

**모이자 4.25** (토) 14시 서울시장 광장  
공적연금강화 범국민대회

**외치자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을 깎는게 아니라,  
기본연금, 국민연금들을 올려야 합니다

○ 5.21 연금행동 긴급토론회 포스터

좌장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

토론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2015. 5. 21. 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 9.7 연금행동 국회토론회 포스터



정책 토론회

# 공적연금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신뢰회복을 중심으로

일시 \_ 2015년 9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_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Public Pension for All

**사회**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원종현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와 요구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토론**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주최

강기정 의원,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인순 의원, 장병완 의원  
최동익 의원, 한정애 의원, 홍종학 의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10.27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대회 포스터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대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일시 : 2015. 10. 27(화)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프로그램**

14:00~14:10 인사말  
 14:10~15:15 사례발표

- 법, 제도상 적용 제외사례 : 특수고용노동자, 학교비정규직노동자 (20분)
- 사업장 지원기준 악용으로 인해 배제된 사례 : 파견노동자 (10분)
- 현장에서 악용으로 인해 배제된 사례 : 건설일용노동자 (10분)
- 사회구조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 : 청년·노인 (15분)
-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 국민연금공단 노동자 (10분)

15:15~15:55 전체 토론 (40분)  
 15:55~16:00 맺음말 및 종료 (5분)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강기정의원,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인순의원, 이인영의원, 홍종학의원



○ 연금행동 소책자 개정판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015년 활동보고서

---

집행위원장 | 정용건

주소 | 150-03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1-17번지 2층

전화 | 070-4211-6578

팩스 | 02-423-6578

이메일 | [pension1045@gmail.com](mailto:pension1045@gmail.com)

홈페이지 | [www.pensionforall.kr](http://www.pensionforall.kr)

---

